

北韓 民族主義 研究

1994. 10

全相仁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序 文

21세기의 문턱을 바라보면서 국제화·세계화가 최고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국경 없는 세계’에서 민족주의는 따라서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기 쉬운 것이 작금의 추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민족주의 정서가 오히려 팽배하고 있다.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시점에서, 남한의 문민정부는 민족 우선주의를 대통령 취임사에 담았고, 북한 역시 민족(주의)적 동기를 전례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北韓 民族主義를 理論과 歷史, 그리고 現實의 3차원에서 분석·평가하기로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심려한 것은 북한이 민족주의적이냐 아니냐는 문답을 피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양분법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의 전향적 개선에 관련해서는 더욱 더 비생산적인 물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 민족주의 연구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의 배경과 동기, 내용적 특질, 그리고 그 시대적 변화추세를 감지하는 것이라 믿는다.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빛을 졌다. 본 연구원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했던 공식적, 비공식

적 토론과정은 지적 자극이 되기에 값진 것이었으며, 초고에 대해 귀중한 코멘트를 해주신 송실대 정외과 서병훈 교수와 세종연구소 이종석 박사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물론 이 연구보고서가 갖고 있을 문제점과 약점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앞으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民族主義 問題는 더욱 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통일에 조그만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4. 10

民族統一研究院

北 韓 研 究 室

要 約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를 이론과 역사, 그리고 현실의 차원에서 분석한 것으로, 사회주의체제의 건설과 발전, 그리고 퇴조와 관련하여 북한의 민족주의를 토착화, 내면화, 그리고 전면화의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한이 민족적 동기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배경과 의도 및 향후 전망에 초점을 두었다.

1. 北韓 社會主義 革命의 民族主義的 土着化

北韓 社會主義體制는 민족국가를 단위로 성립되었으며, 해방에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민족주의를 배척하면서도, 실지로는 그것을 사회주의혁명의 政治理念的手段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일찍부터 민족주의적 이념을 사회주의 원리안에 토착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북한 민족주의의 특색은 반제·반봉건주의를 강력히 표방하였고, 노동자·농민중심의 강한 계급주의적 성향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반자유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민족국가 단위의 대외적 자주성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인식했으며,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남한을

통일하고자 하는 思想的 에너지도 민족주의로부터 구했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주의에는 대의민주적 차원이 설정되지 않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이론에 의한 민족주의의 민중적 차원마저 形式的인 것에 머물렀다. 북한은 또한 대외적 자주성이 저항적 민족주의에 기초함으로써 민족주의의 대외개방적인 측면을 억압하였다. 또한 건국과정 및 한국전쟁에 관련하여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후견과 지원을 받는 자기모순을 드러냈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민족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이에서 기회주의적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북한은 1950년대 초,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기도에서 外勢依存的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반쪽인 남한을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무력침공을 불사하는 등 민족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2. 主體思想과 民族主義의 內面化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로의 본격적인 이행과 발전, 김일성 唯一支配體制의 형성, 1950~1960년대 사회주의권의 내부적 동요와 중소분쟁 등과 관련하여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착시켰다. 주체사상은 민족주의를 사회주의속에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간의 이론적 긴장을 해소하고자 했다.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주의의 부침과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확립 및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와 관련하여 이론적 변용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체사상은 민족주의 대신 ‘사회주의적애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 민족주의의 階級主義的 世界觀을 반영했고, 사상에서의 주체를 필두로 하여 정치·외교적 자주, 경제적 자립 및 국방에서의 자위를 추구하는 한편,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傳統的 王道政治를 모방·강화하였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주체사상에 용해된 북한의 민족주의는 우선 대내적 측면에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정치·사회적 결속을 도모하고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이념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주체사상은 서방세계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및 중국과 소련에 대한 정치·외교적 자주노선의 실천 등을 통해 民族自決原則을 나름대로 고수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북한의 민족주의는 대내적 통합의 원천, 산업화의 견인차, 그리고 대외적 주체 및 자주노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아울러 남한에 대한 강력한 통일의를 유지·강화하는데도 북한의 민족주의는 주체사상의 틀 안에서 기능했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은 擬人化된 권위주의체제를 지향하면서 전통적 왕권정치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김일성 일인 독재정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

락했다. 또한 抵抗的 民族主義은 대외관계의 배타주의와 연결되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한편, 경제발전의 민족주의적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북한이 ‘주체경제’ 논리를 고수한 것은, 1970년대 및 1980대 초의 부분적 경제개방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볼 때 북한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몰고간 유력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또한 1980년대 초부터 맑스·레닌주의와의 결별을 추진했으나 계급사관에 입각한 사회주의 원칙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이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階級 偏向的 民族主義은 줄곧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북한은 소위 ‘4개노선’에 입각하여 주체와 자주, 자립 및 자위를 추진하였으나 경제와 군사방면에서는 중국과 소련에 대한 대외의존이 적지 않았다.

3. 1980年代 以後 民族主義의 前面化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사회주의는 경제적 위기의 심화 및 사회주의권의 세계적 몰락 등을 배경으로 하여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다. 1985년부터 북한의 주체사상은 ‘조선 민족제일주의’ 혹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사회주의 이론과의 결별을 가속화했다. 주체사상에서 사회주의가 퇴조하고 계급적 관점이

약화되는 대신, 북한은 민족주의 개념을 전면화하면서 민족적 동기를 크게 강화하는 理想的 變身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1990년대 이후 통일정책에 있어서 민족 대단결론의 제시와 단군릉 발굴을 비롯한 민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민족적 동기 강화정책은 단기적으로 볼 때 대내외적으로 세불리한 현 국면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방어적인 성격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김정일 後繼體系의 공고화 작업과도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의 전면화에는 소위 흡수통일의 예방에 따른 남북한 공존체제의 유지, 핵개발 의혹의 국제적 호도 및 핵문제의 민족내부화, 경제적 失政의 문화민족주의적 무마, 경제적 개방에 대비한 남한 및 해외교포 자본의 유인과 같은 전술적 목표가 엮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전례없이 민족주의 혹은 민족적 동기를 강화하는 것에는 보다 장기적이고도 전략적인 목표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은 현존사회주의체제가 세계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제시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내용과 본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야 했을 것이다. 이때, 民族主義가 세계적인 탈맑스·레닌주의화 추세하에서 사회주의의 이념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혹은

유일한 사상적 대안으로 모색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서두르면서, 북한 지도부는 기존의 자력갱생적 사회주의적 경제발전 원칙으로부터 후퇴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의 논리적 근거를 민족주의에서 찾았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기적으로 김일성 없는 주체사상이 임박했던 1990년대 초의 상황에서 주체사상의 본격적인 민족주의화는 국내정치적으로도 북한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4. 北韓 民族主義의 向後 展望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북한 민족주의의 미래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주체사상의 골격내에서 민족주의가 사회주의를 우선시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이념적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내용을 민족주의로 채우려는 이론적 노력으로써 民族概念의 再定立과 함께 민족주의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될 것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다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의 길임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가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 고양을 위한 민족사의 재해석 작업이 활발해질 것

이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또한 경제적 개혁 및 개방과 관련하여 저항적 민족주의로부터 開放的 民族主義로 점차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실익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은 민족주의의 대외개방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이럴 경우 민족주의는 남한 및 해외 민족자본의 북한 유입이나 개혁과 개방에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통제 이완 현상의 사전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개혁 및 개방을 통한 북한 경제의 회복 내지 새로운 도약을 기도하는데 있어서 민족주의는 북한 주민들을 이념적으로 재동원하는 동기부여책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민족주의는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 지향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共存摸索的인 것으로 전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국제적인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간의 국력 격차를 십분 감안한 바탕 위에서 민족주의를 무력통일을 위한 이념적 에너지로 보다는, 남북의 平和共存 및 聯邦制를 추진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민족대단결' 원칙을 대남정책의 기본 골격으로 하여 민족과 민족주의를 공통분모로 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범주 설정, 적대적인 남북 대립의 역사적 화해 및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둘러싸고 북한의 민족주의는 남북한간의 새로운 마

찰을 야기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민족주의는 민주적 혹은 민중적 차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이론을 통하여 반민주주의적인 權威主義 政治體制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성 사후에 있어서도 북한은 ‘수령론’에 입각한 유일영도체제와 같은 주체사상의 핵심적 사항의 수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나 ‘사회주의 대가정’의 개념의 강화를 통해 민족주의는 김정일의 권력 기반을 공고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理論的 背景	9
1. 民族主義의 歷史的 起源과 展開過程	9
2. 民族主義와 社會主義	23
3. 帝國主義와 第3世界 民族主義	35
第 III 章 北韓 社會主義革命의 民族主義的 土着化 ...	43
1. 北韓 社會主義의 民族主義的 定向	43
2. 北韓의 社會主義革命과 韓國戰爭	48
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48
나. ‘조국해방전쟁’	51
3. 社會主義革命期 北韓 民族主義의 評價	54
第 IV 章 北韓 社會主義建設과 民族主義의 內面化 ...	61
1. 北韓 社會主義의 浮沈과 主體思想	61
2. 主體思想과 民族主義	73
가. ‘사회주의적애국주의’	73
나. 社會主義의 民族自主的 發展	79

다. 支配構造의 傳統的 權威主義·····	84
3. 社會主義建設期 北韓 民族主義의 理想과 現實·····	92
第 V 章 北韓 社會主義의 退潮와 民族主義의 前面化·····	100
1. 北韓 社會主義의 試鍊과 ‘조선민족제일주의’ 및 ‘우리 식 사회주의’·····	100
2. 最近 北韓의 民族的 動機 強化政策·····	110
가. 民族大團結에 의한 統一·····	110
나. 民族文化 遺産의 復元과 發展·····	116
3. 民族的 動機 強化의 意味와 評價·····	123
第 VI 章 結 論·····	127
參考文獻·····	134

第 I 章 序 論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이론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사회주의 체제는 모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기본단위를 계급이니 세계가 아닌 民族範疇에서 발견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은 건국 이후 민족을 사회주의혁명의 수단적 도구로 설정하고 민족주의에 필적하는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의 토착화를 모색했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제시하면서 계급적 관점과 민족적 입장을 실질적으로 융합했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를 사상적으로 내면화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북한은 그것을 백안시하고 푸대접했다.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지배적 해석은 그것이 사회주의에 적대되는 제국주의 사조 및 부르조아 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민족적 동기를 전례없이 강조하면서 민족주의 개념과의 和解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 “민족대단결” 원칙의 천명과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사업은 북한의 민족주의가 그 이전의 내면화 상태로부터 벗어나 전면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게 한다. 최근 북한의 최고 지도부의 발언속에는 계급을 민족의 下位概念으로

인식하여 민족의 이익을 계급의 이해에 선행시키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은 자기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로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한 1993년 4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여 남한에 대한 민족주의적 공세를 강화했으며, 단군유골의 출토 발표에서 보는 것처럼 민족문화 복원 사업과 민족사의 재해석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북한이 1980년대 중반 이후 民族概念을 강조하는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주의의 장래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하여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들에 연루되어 있다.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그러나 북한의 변화에 의해 제기되는 것만은 아니다. 1991년 말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남한내 재야와 진보학계에서도 統一路線을 둘러싸고 민족대단결의 범위와 의미에 대한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곧, 일각에서는 민족대단결론이 남한정부가 주도하는 계급통일 및 흡수통일을 의미하기에 “민족대단결론의 허구를 극복하자”고 주장한 반면,¹⁾ 다른 한편에서는 “통

1) 정대화, “민족대단결론의 허구를 극복하자,” 『사회평론』 (1992. 4), pp. 44~49.

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이 점증하는 현시기에 있어서” 과거와 성향을 불문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것은 통일의 근본전제이며, 통일운동의 핵심적 과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²⁾

그러다가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올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민족우선주의’를 내세움으로써³⁾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간의 理想的 共通分母를 적극적으로 재확인했다. 사실상 남한의 최고 지도자가 민족주의에 관해 적극적이고도 자신감있는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해방 이후 한미관계의 특수성과 대외종속적 경제발전, 그리고 軍部獨裁 등의 경험은 남한이 민족주의를 거론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 민주화투쟁 시기에는 남한 정부의 ‘반민족주의적’ 성향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우선주의는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의 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금의 현실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에서

2) 오경훈, “통일운동과 ‘민족대단결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대화의 「민족대단결론의 허구를 극복하자」에 대한 논평,” 「경제와 사회」, 14 (1992), pp. 219~29. 이에 대한 답론은 정대화, “통일운동론의 분화와 논쟁의 두 지점: 오경훈의 논평에 대한 답론,” 「경제와 사회」, 14 (1992), pp. 229~39 볼 것.

3) 「東亞日報」, 1993.2.26.

고조되고 있는 민족적 동기의 강화를 분석할 필요성을 시대적 요구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 우선 북한 민족주의 연구의 한 지류는 다분히 情緒的 主觀主義에 입각한 비논리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80년대 이전의 논의들은 남북한의 민족 내지 민족주의 개념을 평면적으로 대비하여 남한 민족주의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적하는 것이 중심이었고,⁴⁾ 북한의 민족주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조차 북한의 민족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單細胞的 反應이 남아 있다. 보기로 남한의 소위 운동권 논리를 자의적으로 단순화시킨 끝에 “김일성정권은 반민족주의, 반공은 민족주의”라는 식의 원색적 결론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으며,⁵⁾ 김일성의 전범 경력과 북한의 세습정치를 이유로 북한은 “민족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 옳다”라는 단정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⁶⁾

4) 예컨대 김윤식, “북한의 민족개념: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통일정책」, 제4권 4호 (1978), pp. 27~44; 양호민, “남북한의 민족이념,” 「통일정책」, 제4권 4호 (1978), pp. 44~59; 최상룡, “남북한의 민족개념 비교,” 「통일정책」, 제4권 4호 (1978), pp. 12~26 참조.

5) 양동안, “친북은 민족주의적이고 반공은 반민족주의적인가?,” 「한국논단」 (1994.2) pp. 204~09.

이와 대조적으로 학계 일각에서는 북한체제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입장이 꾸준히 견지되어 왔다. 그 주종은 이정식과 스칼라피노, 서대숙, 커밍스 등의 영어권 저작으로서, 북한이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이 민족 개념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이전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다.⁷⁾ 그러다가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북한의 민족주의를 주체사상과 연관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주목을 끌고 있다. 여기서의 주요 논지는 동구 및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붕괴 이후 북한이 주체사상에 민족주의를 원용하거나,⁸⁾ 혹은 주체사상을 민족주의적으로 變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⁹⁾ 이에 덧붙여 북한의 주체사상 자체를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이념으로 파악하여, 1980년대 이후 주체사상의 체계화과정을 “탈맑스·레닌주의화 및 민족주의 전면화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도 제

6) 박봉식, “남북통일에 있어서 「민족」 「민족통일」 문제,” 「북한학보」, 17 (1993), pp. 59~70.

7)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8) 진덕규, 「북한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서울: 통일원, 1991).

9) 徐載鎭, “북한의 민족주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을 중심으로,” 「統一研究論叢」, 제2권 1호 (1993), pp. 71~96.

기되어 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 민족주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 우선 민족주의 개념에 대한 歷史的, 理論的 認識이 부족하다. 민족주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적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 못지 않게, 각 민족주의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일이다. 그리하여 북한 민족주의 연구에 있어서도 흑백논리식 평가보다는 역사적 조망과 비교적 맥락을 통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북한 민족주의 연구는 대체로 남북한의 대결구도를 전제로 한 정통성 시비가 위주였다. 그러나 남북한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따지는 일은 민족주의 논의의 핵심 사항이 아니다.

기존의 북한 민족주의 연구에 관한 이상과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이 보고서의 研究 目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체제를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북한 민족주의의 특징을 역사적으로 비교·평가한다. 둘째,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 및 그 변용 과정을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검토한다. 셋째,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민족적 동기를 강화하고 민족주의를 사실상 복권하려는 배경과

10) 金淵珪, “金日成 主體思想에 관한 研究: 그 民族主義의 性格에 대한 批判的 分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의도를 분석한다. 끝으로 북한에서 민족주의가 사회주의 이념을 대체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향후 남북한의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통일의 주역으로서 남한이 북한 민족주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념적 역량 축적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歴史的이고 比較的인 接近方法을 병행한다. 다시 말해 북한 민족주의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사례 및 남한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북한 민족주의의 논리와 특징을 부각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또한 文獻調査 研究를 중심으로 북한 민족주의를 분석한다. 주요 분석 대상자료로서 우선 북한 원전의 경우 민족주의에 연관된 북한 최고지도부의 저작과 담화, 그것들에 관한 북한의 각종 기관지 및 언론매체들의 해설, 그리고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의 유관 저작 및 사전들을 들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북한 민족주의에 관한 국내외 2차 자료 및 연구성과들이 분석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서 제2장은 북한 민족주의 연구를 위한 理論的 背景이다. 여기에서는 민족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간의 관계, 그리고 제국주의와 연관한 제3세계 민족주의의 특성을 각각 고찰한다. 제3장은 해방 직후 정권 수립 과정에서부터 한국전쟁까지 북한 사회주의혁명의 民族主義

的 土着化 過程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사회혁명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 민족주의의 성격이 고찰되고 비판될 것이다. 제4장은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 민족주의를 분석한다. 먼저 사회주의의 건설 및 부침기에 있어서 북한 민족주의의 內面化 過程을 주체사상의 형성 및 변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주체사상을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제5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민족적 동기 강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 “민족대단결론” 및 민족문화 유산의 계승·발전 명제를 북한 민족주의의 전면화라는 시각에서 고찰할 것이다. 덧붙여 북한이 최근에 민족주의를 강력히 제기하는 背景과 意圖를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서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로부터 민족주의로 대체될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것이 특히 김일성 사후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전망한다.

第 II 章 理論的 背景

1. 民族主義의 歷史的 起源과 展開過程

가장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민족주의 (nationalism) 는 민족 (nation)이 역사의 으뜸 행위자라고 믿는 정치이념 이자 그렇게 되기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이다. 다시 말해 民族主義는 사회적 삶의 '기본' 단위로서—비록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가족이나 종족, 계급이나 지역 또는 세계 등이 아닌 민족을 설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이 민족주의를 반드시 선행하는 개념은 아니다. 민족의 형성이 민족주의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과 민족주의간의 관계는 민족 개념의 외형적 범주와 내용적 속성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질문의 대상일 뿐이다. 사실상 민족주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그 주도세력 여하에 의해 카멜레온 같은 양상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민족과 민족주의를 연역적으로 개념 정의하기 보다는, 민족주의의 태동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귀납적인 접근을 통해 그것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밝히고 그들간의 관계를 歸納的으로 종합하는 일이 보다 실리적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그것의 자연적인 속성과 보편적 근거를 가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민족형성을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으로 생각하

는 것은 直觀의 誤謬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가 민족주의 시대를 살아 온 것은 지난 수세기에 불과하다. 그 이전 수천년의 인류 역사가 민족이라는 사회적 단위와 관계없이,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모르고 전개되었다는 의미에서 민족주의는 필연적인 것도 또한 당위적인 것도 아니다. 민족주의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민족과 민족주의와의 선후 관계 역시 역사적으로 일정하지 않다. 민족주의는 근대 서구사의 人爲的 副産物로서, 불과 지난 몇 세기 동안 전세계에 걸쳐 확대된 것이다.

언어, 지역, 혈연, 문화, 역사 그리고 민족의식 등을 중심으로 민족형성과 민족주의의 기원을 비서구사회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은 민족주의의 원초적 재질을 지적하는 것일 뿐, 서구에서 태동하고 발달한 민족주의의 본질적 측면에 필적할 수는 없다.¹¹⁾ 민족을 빚어내는 재료로서의 先民族 혹은 原

11) 慎鏞廈에 의하면 서양에서 제시된 민족형성 이론은 “유럽과 같이 중세를 장기간 지방분권적 봉건사회의 형태로 경험한 지역과 민족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좁은 한계를 가진 이론”으로서 “한국 민족을 비롯하여 이미 고대와 중세에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와 민족을 형성하였던 민족들에게는 들어맞지 않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인용하, “민족 형성의 이론,” 인용하 편, 「민족이론」(서울: 문학과 지성, 1985), pp. 13~58 볼 것. 그는 언어, 지역, 혈연, 문화, 역사 등 민족형성의 객관적인 요소들을 열거하면서 민족이 전근대의 비서구사회에서도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의 형성

民族性은 비서구사회에서 더욱 더 뚜렷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서구의 민족주의가 비서구지역에 ‘전달’되

에 의한 ‘정치의 共同’ 및 그에 따른 ‘경제의 共同’ 현상, 그리고 민족의식과 같은 주관적 요인이 근대 이전의 한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존재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인정하듯이 전근대 시대, 비서구지역에서 성립된 정치 및 경제 공동체는 ‘저급’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점에서 ‘전근대민족’과 ‘근대민족’간의 ‘뚜렷한 질적인 차별성’을 제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노태돈,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19 (1992), pp. 16~25; 일반적으로 서구문명 밖에서 출현했던 전근대 사회의 통일국가는 비록 전제적 (despotic) 이기는 했지만, 사회의 구석구석을 실질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하부구조적 (infrastructural) 능력은 결여하고 있었으며, 신분적 세습에 기초한 지배계급은 교통 및 통신의 장애 조건에 편승하여 사실상의 분권화된 지역경제를 구축했다. Michael 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 I: A History of Power from the Beginning to A.D. 17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 1~33 참조; 아울러 근대 이전의 세계체계는 세계경제 (world-economy) 이전의 단계로서, 세계제국 (world-empire)의 구도하에서 몇몇 패권적 제국이 세계를 정치·문화적으로 할거하고 있었다.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I* (London: Academic Press, 1974) 참조; 그 결과, 패권국가에 종속된 주변부 국가가 독자적인 ‘민족의식’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근대 이전의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존재했다는 주장은 예컨대 신라시대의 화백제도로부터 민주주의의 기원을 설명하고, 정약용의 閭田法 사상이나 동학혁명의 계급타파주의를 가지고 사회주의가 한국에서 자생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민족주의적’ 인식의 비약이다.

었을 때, 민족주의가 더욱 더 강력한 열정으로 대두한 원인이 될 수는 있다. 또한 ‘만들어졌다’는 논리만으로는 민족주의의 끈질긴 지속성을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전근대사회의 種族的 紐帶가 민족주의에 대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¹²⁾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주의의 조건 내지 기반이었지 민족주의 그 자체는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주의에 대해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선도한 것은 하등의 우연이 아니다. 민족주의에 대한 고전적 연구자라고 알려지는 콘 (Hans Kohn),¹³⁾ 그리고 카 (E. H. Carr) 등은¹⁴⁾ 민족주의가 무엇보다도 유럽에서의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과 그에 따른 近代的 國家體系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곧, 민족의 형성과 민족주의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이 부족이나 부락과 같은 자연공동체로부터 국가에 의해 실질적으로 매개되는 政治共同體로 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수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정학적 체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능했다는

12) Anthony D. Smith, *Theories of Nationalism* (London: Duckworth, 1971);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볼 것.

13)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New York: Macmillan, 1961).

14) E. H. Carr,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Macmillan, 1945).

것이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전근대사회에서 언어나 지역, 혈연, 문화, 역사, 경제생활 등의 영역에서 존재하던 삶의 공통분모 혹은 민족형성의 원초적 요소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오히려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태동에 있어서 이들 이상으로 훨씬 중요했던 사실은 ‘政治的’ 形式의 國民的 統攝이었다.

한편, 근대 국가의 형성과 자본주의의 발달이 역사적 친화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민족주의 역시 ‘경제적’ 형식의 국민적 통합과 무관할 수 없다. 그리하여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변동을 또 하나의 중요한 기원으로 갖고 있다. 민족의 형성은 자본주의 상품경제 발전이 봉건적 지역경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적 국민경제를 성립시킨 결과이다. 그것은 일정 지역의 주민이 같은 종류의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생산관계로 연결된 經濟共同體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전국적 규모의 동일한 생산 및 소비권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발흥하여 지방적이고 봉건적인 지역경제를 타파한 이후이다. 이에 관련하여 젤너 (Ernest Geller)는 민족주의가 산업화된 근대적 국민경제의 문화적 요구와 필요성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한다.¹⁵⁾ 산업화는 과거 전통사회의 친밀한 구조와 질서를 잠식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

계를 심각히 분열시켰는데, 이를 전체적인 국가 수준에서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政治文化的 機制가 바로 민족주의였다는 것이다.

결국 민족주의의 기원은 근대 서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근대국가의 발달과 자본주의 산업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처음 ‘만든’ 주역도 당연히 국가건설자의 역할을 수행한 군주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선도한 부르조아 계급이었다. 그 이후 민족주의는 수세기 동안 전세계에 걸쳐 어떠한 정치세력도 피할 수 없는 바람[風]이 되었고, 역사의 흐름속에서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동과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그릇이 되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의 개념적 범주는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擴大되었고, 이것이 민족주의의 이론적 혼미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태동하였으며, 역사적인 변화속에서 그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고 多樣化되었는가?¹⁶⁾

15) Ernest Geller,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4); 어네스트 겔너, “근대화와 민족주의,”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pp. 127~96.

16) 全相仁, “民族主義의 形成과 展開過程에 관한 一考,” 「統一研究論叢」, 제2권 1호 (1993), pp. 1~21; 전상인, “국제정치학을 위한 역사사회학적 비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

두말할 나위 없이 근대적 사회변동의 자궁은 중세 유럽이었다. 중세 유럽의 가장 큰 특징은 군주, 봉건제후, 카톨릭교회, 그리고 자치도시에 의해 구성된 政治的 分權化였다. 봉건제는 군주와 지방 봉건영주간의 쌍무계약적 관계에 입각하여 ‘암흑기’의 중세 유럽을 혼란과 위기로부터 구제한 제도적 장치였으며, 카톨릭교회는 로마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최고의 정신적 권위를 구가하던 교황권에 바탕을 두고서 유럽의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세속권과 교황권은 더러는 마찰했으나 대체로 공생했다. 중세 유럽의 또 다른 특징은 생산활동의 압도적인 중심이 농업인 가운데 워낙 반경제적, 특히 반상공업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중세 유럽은 봉건제와 카톨릭교회의 대립적 공존의 이면에서 자치도시의 발전을 경험했다. 그리고 자치도시는 자본주의 발달의 温床地로 자라났다.

14세기 경부터 분권화되어 있던 중세 유럽의 정치적 질서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속군주들이 대내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드러낼 무렵이었다. 권력의 脱宗教化를 꾀하고 봉건영주들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이들은 근대 국가건설의 주역이었다. 그 이후 유럽에서는 군주들과 교회 및 영주세력간의 충돌이 불

가피해졌고, 또한 군주들 상호간의 각축도 치열해졌다. 그들간의 일시적 타협은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신분제국가로 나타났다. 신분제국가는 법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특히 영토의 개념을 강화함으로써 근대국가의 ‘對外的 主權’을 유럽사회에 관례로서 확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대외적 주권은 후일 근대 국민국가의 태동과 민족주의의 형성을 가늠하는 일차적인 관건이 되었다.

그러나 신분제국가에서 군주의 지배권은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기는 했지만 ‘배타적’인 것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신분제국가가 기본적으로 장원과 도시, 그리고 교회의 자율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3~14세기에 형성된 유럽의 신분제 의회로부터도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근대국가의 형성의 또 다른 관문인 ‘對內的 主權’의 공고화는 16세기 이후의 역사가 지켜볼 수 있었다. 1500년경 서유럽에는 대략 500여개의 비교적 독립적인 대소간의 통치단위가 난립·경쟁하고 있었다. 사실상 이때만 해도 탈중세기 유럽의 정치변동은 연방제나 제국, 카톨릭신정, 비정치적 무역공동체, 혹은 기존의 봉건제 등 국민국가 이외의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열려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대세는 왕권강화에 주력한 세속 군주들에게 기울어졌고, 그 방향은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당시 군주들은 교회와 봉건영주 등 라이벌 정치세력에 비해 몇가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중세 이후 군주권이 고유하게 비축하고 있던 전문화된 제도적·법률적 노하우와 함께, 당시 유럽이 다른 제국들의 침략이나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왔으며, 더욱이 ‘지리상의 발견’은 군주들로 하여금 국가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해외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대 국가건설을 지향한 군주들의 승리를 가장 결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자치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던 자본주의 및 부르조아계급이었다. 근대국가와 별도의 기원을 갖고 막 태동하던 資本主義生産樣式은 이 당시만 해도 선택 가능한 몇개의 국가형태를 놓고 망설이는 중이었다. 이때 군주들과 신흥 자본가계급은 서로의 이해가 일치함을 발견했다. 군주들은 왕권강화에 필요한 조세원의 증대를 위해 무역 및 상공업의 발달을 지지했고, 초기 부르조아들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권위가 등장하는데 편승하여 각종 인적·물적 자원이 전통적, 신분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건설의 성패를 가늠한 최대의 갈림길은 戰爭이었다. 전쟁이 유럽사에서 일상화되면서 군주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전쟁 만들기(war making)는 조세나 징병 및 징발의 필요성을 크게 제고시켰고 그 결과 기존의 지배계급 및 일반 주민들에게 커

다란 부담을 안겨주면서 그들의 저항을 초래했다. 군주들은 특권적 지주계급과 지배동맹을 맺거나 신흥 부르조아계급과의 연계를 확보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조달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경우, 군주들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대내적인 반대세력을 제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건설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기본적인 과제들—영토의 확정, 중앙집권화, 국가조직의 형식적 자율성의 확보, 통계 및 재무기구의 발달,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까지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바로 이 점을 털리는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들었다”는 말로 요약하였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6~17세기에 걸쳐 유럽에서는 絶對君主制가 등장했으며, 이는 ‘대외적 주권’에 이어 ‘대내적 주권’이 공고화된 것을 의미했다. 절대왕정의 핵심은 “국가 그것은 곧 나다”라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언명에 가장 잘 나타난다. 이는 王權神授說에 입각하여 국가와 왕권을 동일시하면서 군주의 대내적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지주계급은 정치적 특권을 일부 포기하는 대가로 국가중심의 수취구조에 편승하였고, 신흥 부르조아계급 역시 상공업활동과 무역의 자유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근대 통일 국가의 성립을 환영하였다. 또한 주민의 절대적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 역시 절대국가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조세원의 안정적 유지라는 측면에서 군주가 농민을 특권계급의 전횡으로부터 보호했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의 絶對王政은 신분과 계급, 지역과 인종을 초월한 일원적 통치구조를 영토내에 구축함으로써 민족의 외형적 범주 설정에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절대주의 국가는 그러나 아직도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 이전 단계로서 사실상 '후기' 봉건제국가에 가까웠다. 근대국가가 민족형성의 기본틀로서 작용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민족주의는 절대왕정의 직접적 산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점점 부르조아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동안 절대군주제 자체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대두함으로써 탄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곧, 민족주의는 군주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집단적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대의체를 설정하기 위해 政治的 主權을 재정립하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민족국가 대열의 선두주자 영국에서는 군주제에 입헌제적 제약을 가하고 신분제 사회의 봉권적 특권을 폐지하여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비교적 순조로웠다. 그만큼 영국의 민족주의는 '조용히' 태동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18세기에 들어와서도 절대왕정과 신분귀족이 구체제를 완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프랑스혁명은 전쟁으로 인해 재정실조에 시달린 부르봉 왕조가 특권 귀족

계급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서 발단되었지만, 혁명의 주역은 곧 농민으로 바뀌었다. ‘사회혁명’으로서의 프랑스혁명은 민족형성과 민족주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프랑스혁명은 역사상 최초로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이 초자연적인 기원이나 전통에 있다는 것을 배격하고 人間平等과 主權在民의 原理로서 ‘국민’의 개념을 태동시켰다. 혁명 이후 공포시대나 테르미도르의 반동과 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프랑스는 근대 국민국가를 향해 질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인들은 정치적 공동체를 실감하게 되었다. 프랑스혁명은 또한 자본주의의 발달을 통한 경제적 공동체의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프랑스 자본주의의 발전은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결과, 곧 民族國家 建設이 그 배경이었던 것이다.

프랑스혁명 끝에 등장한 나폴레옹 시대는 비록 궁극적으로 군사독재체제 및 제정으로 귀결되기는 했지만, 민족국가 건설에 있어서는 가일층 박차가 가해졌다. 나폴레옹은 최초의 ‘대중적’ 독재자로서 관료제의 발달과 상비군제도의 발전 등을 통해 강력한 국민국가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소위 나폴레옹 법전을 공포하여 근대 시민사회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다시 말해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프랑스는 전통적인 특권 귀족계급이 소멸되었고, 그 대신 농민으로 대표되던 대다수의 피지배계급이 신분적으로 해방되어 ‘국민정치’ (nation-

al politics)의 장에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민족주의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 이후 ‘민주적’ 차원을 새로이 첨가했다. 당시만 해도 산업자본주의의 발달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따라서 자본주의에 의한 계급적 구분이 미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면, 프랑스 민족주의가 표방한 市民的 平等을 허구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매도하는 것은 선부른 추론이다.

나폴레옹은 또한 민족주의 ‘최고의 전도사’였다. 나폴레옹 전쟁은—비록 그 자체로서는 실패로 끝났지만—인근 유럽국가들에게 민족주의 이념을 직접 전파하거나 그들의 민족주의를 고무·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나폴레옹전쟁에 의해 형클어진 유럽의 정치질서는 1815년 비엔나체제의 결성 이후 국가간 勢力 均衡主義로 정착했다. 국가간 체계의 형성은 일찌기 절대왕정 국가들이 1648년에 체결한 베스트팔렌조약이 최초였다. 그러나 비엔나협정은 유럽에서 제국이 출현할 수 있던 마지막 기회의 무산을 확인하면서 민족단위의 국가건설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리고 유럽대륙에서는 나라마다 민족주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경우, 18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마찌니, 카보우르, 그리고 가리발디가 주도한 민족주의 운동은 통일국가를 이룩하는데 성공하였다. 독일 역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적 통일운동이 벌어졌는데, 1834년의 ‘관세동맹’에 의한

경제적 통일에 이어 1871년에는 비스마르크에 의해 마침내 독일제국의 성립을 쟁취했다. 이렇듯, 민족주의는 ‘통일’의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한 것이다.

프랑스가 민족주의의 倉庫였다면 영국은 근대 자본주의 발달의 窻口였다. 잇따른 시민혁명에 의해 정치적 통제권을 일찌기 상실한 영국의 봉건계급은 새로운 경제관과 자본주의적 농업경영 방식에 눈을 돌렸으며,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걸쳐 산업혁명이라는 획기적인 사회변동을 선도했다. 산업혁명의 주역은 국민국가의 틀속에서 성장한 부르조아계급이었고, 이들은 농민을 대신하여 새로운 피지배계급으로 등장한 프롤레타리아와 숙명적인 갈등관계를 연출했다. 그 결과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발달 초기의 계급갈등에 의해 커다란 시련에 직면했다.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성장과 그들에 의한 계급착취가 민족범주의 대내적 통합성을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부르조아 없는 민주주의는 없었다”는 무어(Barrington Moore, Jr.)의 주장은 자본가계급에 의해 구질서하의 특권계급이 소멸되어 민족주의의 ‘민주적’ 차원이 진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부르조아혁명이 민족국가 성원 전체의 초계급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국가가 資本主義 國家로 변신하였음을 뜻했다.

그러나 ‘만국 노동자의 단결’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구호로써,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민족 카테고리

초월한 계급범주를 국제화시키려던 맑스의 호소는 끝내 무위로 끝났다.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대신, 시민권의 획득에 의한 민주주의의 확대에 안주했다. 물론 부르조아들은 피지배계급의 정치적 권리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이 보통선거권을 쟁취한 것은 자본가계급에 대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민족범주에 대한 계급 카테고리의 마지막 투항이기도 했다. 普通選舉權의 제도적 확립이 ‘실질적’ 민주주의에 크게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긴 역사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완성’하면서 민족주의 개념에 ‘민중적’ 차원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실지로 자본주의의 내용도 20세기에 들어와 그와 같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의해 제도수정의 길을 밟을 수 밖에 없었다.

2. 民族主義와 社會主義

맑시즘에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이론이 없다.¹⁷⁾ 민족문제가 맑스주의의 아킬레스건으로 비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7) Tom Bottomore, "Sociology," in D. McLellan, ed., *Marx: The First 100 Years* (London: Fontana, 1983), p. 140; Nicos Poulantzas,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New Left Review, 1980), p. 93.

맑스주의가 민족주의의 문제를 적절히 수용하는데 실패한 원인은 흔히 다음의 두가지 이유로 설명된다.¹⁸⁾ 첫째는 맑스주의의 理論的·方法論的 不適合性이다. 예컨대 역사적 유물론은 민족주의를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상부구조라는 입장에서 기계적·도식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민족주의 고유의 정치적 역동성을 간과하였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로 대변되는 맑스주의의 보편철학은 민족주의와의 양립을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둘째는 맑스주의의 政治主義的 傾向이다. 곧, 대부분의 맑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민족문제는 사회적·정치적 실천과 그에 수반된 전술적 차원에서만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그 결과, 민족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 이론에 입각한 일관성이 결여된 채, 실천과정에서 변이만 두드러졌다.

맑스와 엥겔스에게 있어서 항상 우선을 차지했던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階級的 爭點이었으며, 그 결과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것에 불과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민족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존재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현실적인 역사 무대에 최초로 등장했던 1848년 혁명에 즈음하여 출간된 『공산당 선언』은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선언과

18) 임지현, “사회주의 민족이론과 민족문제,” 『사회와 사상』, 20 (1990), pp. 242~67, 243.

함께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요구로 끝나 있다.¹⁹⁾ 이것은 민족내의 계급간의 적대감이 사라짐에 따라 민족간의 적대감도 자동적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맑스주의 이데올로기가 민족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²⁰⁾

맑스와 엥겔스가 당시 민족주의의 존재를 자각하고 세계사가 민족국가들로 분할되는 현상에 주목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대의 고전사회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맑스와 엥겔스의 사고 역시 서유럽중심적이었고,²¹⁾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동유럽 소수민족의 민족운동이나 식민지 해방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물적 토대를 결여한 민족들의 분리·독립운동을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현상으로 간주했다. 맑스와 엥겔스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을 구분하는 民族的 偏見을 드러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논지에 근거한 것이다.²²⁾ 맑스가 후진

19) 마르크스·엥겔스, “공산당선언,” Karl Marx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이론: 민족해방이론의 주체적 정립을 위하여」 (서울: 나라사랑, 1989), pp. 64~67.

20) 콜라코프스키(Leszek Kolakowski),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민족의 실체: 자연적 공동체와 보편적 형제애,”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서울: 한겨레, 1986), p. 60.

21) 앤터니 스미드(Anthony D. Smith), “민족주의와 고전사회학 이론,”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p. 31.

22) 로날도 몽크(Ronaldo Munck) 저, 이원태 옮김, 「사회주의 혁명

농업국가인 러시아로부터 사회주의혁명을 기대하지 않은 것에도 민족에 대한 이와 같은 差等的 認識이 작용했다.²³⁾ 맑스는 민족문제의 모든 측면을 자본주의로 환원시켜 설명하고자 함으로써 비유럽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내리지 못했던 셈이다.

사실상 민족의 소멸을 필연적 과정 혹은 당위적 절차로 해석한 맑스의 입장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그가 볼 때 민족형성의 원동력이었던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한 결과로서 나타난 세계적 규모의 시장구축과 국제적 분업화는 민족문제의 해결을 밝게 전망하게 하는 실증적 단서였다. 또한 맑스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類的 存在’로서 대변되는 그의 철학적 인간관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인간군집성의 가장 자연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는 가족도 아니고 부족이나 민족도 아닌 전체 인류집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 프롤레타리아의 초국가적 이해를 전제로 한 맑스의 ‘프롤레타리아의 무조국성’ 명제는 非現實的인 희망사항으로 드러났다. 민족주의는 코스모폴리탄적이어야 할 사회주의 운동에 제동을 걸기 일쑤였던 것이다.

1848년 혁명의 실패 이후 맑스와 엥겔스는 민족문제에 대

과 민족주의」(서울: 민·글, 1993), pp. 23~33.

23) 닐 마틴(Neil A. Martin), “마르크스주의, 민족주의, 러시아,”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 pp. 125~54.

한 인식을 다소 변화시켰다. 그것은 민족 범주화에 있어서 예외에 속했던 폴란드와 아일랜드의 독립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²⁴⁾ 이는 영국 부르조아계급의 제국주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민족주의에 대한 사상의 전환점이라기 보다는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에 불과했으며 민족운동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²⁵⁾ 프롤레타리아에게 조국이 없다는 맑스의 논리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던 바, 개별적인 社會主義 民族國家는 계급과 국가가 없는 미래사회로 가는 길에서의 과도기적 단계에 불과했다. 맑스에 의하면 사회주의의 건설은 여전히, 그리고 오직 ‘국제적’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²⁶⁾

민족주의 문제를 둘러싼 사회주의자들의 고민은 맑스 사후 제국주의가 강화되면서 보다 심각해졌다. 제2인터내셔널의 시기에 들어와 민족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의 입장은 분과

24) 마르크스·엔겔스, “식민지와 종주국의 관계—아일랜드론,”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의 관계 - 폴란드론,” Karl Marx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이론』, pp. 84~128, 129~65.

25) 로날도 몽크 저, 이원태 옮김,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주의』, p. 39.

26) 로스돌스키(Roman Rosdolsky), “노동자와 조국: 「공산당 선언」에 대한 소고,”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pp. 72~82.

적이 되었다. 이때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이론적 조류가 형성되었다.²⁷⁾ 첫째, 폴란드 사회주의의 우익진영은 민족문제의 해결, 곧 폴란드의 독립을 폴란드 노동운동의 주요 목표로 간주했다. 이에 반해 폴란드 사회주의운동의 좌익진영은 민족주의의 침투에 의한 사회주의운동의 약화를 염려하면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견지했다. 한편 오스트리아-맑스주의 노선은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내에서 민족들의 ‘문화적’ 고유성을 옹호하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다. 끝으로 레닌의 입장은 사회주의적 강령의 우위를 신봉하면서도 진보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民族自決權 原則을 승인·옹호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민족문제에 관한 의미심장한 토론은 1890년대 폴란드의 민족독립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의 폴란드사회당은 폴란드의 정치적 독립을 최대 목표로 삼으면서 社會主義 愛國主義를 주창했는데, 이에 대해 룩셈부르크는 1893년 폴란드왕국의 사회민주당을 창설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맑스의 주장을 계승·강화하였다. 그녀는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폴란드가 사실상 러시아에 이미 통합되어 있다고 보고,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27)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서울: 까치, 1989), pp. 9~10.

와 폴란드 프롤레타리아가 동일한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였다. 룩셈부르크에 의하면 폴란드의 독립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며, 민족주의 슬로건은 노동운동에 극히 해롭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民族的 系譜를 따라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며 국제적 단합을 저해하여 전체 사회의 초계급적 이해를 추구하는 노동자들의 에너지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룩셈부르크는 주장했다.²⁸⁾

룩셈부르크는 민족적 억압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민족의 존재적 실체는 부정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어떠한 민족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상반되고 모순되는 이해를 지닌 敵對的 階級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족과 같은 사회적 총체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단지 계급적 적대감을 호도하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저해하기 위한 부르조아계급의 고안물이라고 인식했다. 民族的 抑壓은 지배계급의 역할이며, 그것은 지배계급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족적 갈등을 사회주의의 가능한 지렛대가 아닌 하나의 장애물로 보기를 고집했다는 점에서 룩셈부르크는 극좌파 사회주의자였다. 그녀는 현실주의자라기 보다는 이상주의자였다. 그 결과 룩셈부르크는 후일 레닌이라는 실천의 천재와의 충돌에서는 패배할 수

28) Rosa Luxemburg, *Selected Political Writings of Rosa Luxemburg*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밖에 없었다.²⁹⁾

한편, 오토 바우어 (Otto Bauer)와 칼 레너(Karl Lenner) 등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스트로-헝가리제국의 유지를 위하여 민족자결권 대신에 제민족의 非領土的·文化的 自治를 주장했다.³⁰⁾ 그들에 의하면 ‘문화’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상부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붕괴하더라도 민족문화는 그대로 존속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운동은 원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일 뿐, 민족문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입장은 複合 民族國家인 오스트로-헝가리제국 내에 산재해 있는 상이한 민족들의 민족적·문화적 전통을 적극적으로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 민족의 성원들은 자신들의 교육, 언어, 그밖의 문화 문제는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정치적 및 경제적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권위하에 두자고 주장했다.

레닌의 민족주의관은 룩셈부르크의 좌경적 편향과 바우어·레너의 우경적 경향을 동시에 거부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 모든 사회주의자가 그랬던 것처럼 레닌 역시 프

29) 미셸 레위(Michael Loewy),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민족문제,”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pp. 156~83.

30) Otto Bauer, *The Austrian Revolution*, trans. by H. J. Stenning (New York: Burt Franklin, 1970); 로날도 몽크 저, 이원태 옮김,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주의』, pp. 76~82.

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자로 출발했다. 그러나 그는 민족문제가 계급투쟁을 흐리는 당혹스러운 난제가 아니라 革命的 에너지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저장소라고 생각한 최초의 인물이었다.³¹⁾ 그리고 레닌은 맑스의 예상을 깨고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다. 맑스는 애초부터 후진 농업국가인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기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870년대 이후 러시아의 혁명적 움직임에 관련하여 러시아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자본주의를 먼저 경험하지 않고 직접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강요받을 무렵인 1883년에 죽었다. 맑스주의는 맑스 당대에서는 실천에 실패했고, 그의 死後 레닌에 의해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레닌은 국제주의와 민족주의간의 辨證法的인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맑스와 룩셈부르크를 능가했으며 민족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레닌나 바우어보다 진지했다. 맑스주의자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레닌의 공적은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정치적 차원이 점차 지배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레닌은 제국주의 시대의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 민족주의가 차지하는 戰略的

31) 콜라코프스키(Leszek Kolakowski),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민족의 실체: 자연적 공동체와 보편적 형제애,”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p. 61.

價値에 주목했다. 그는 민족간의 자유로운 분리만이 당면한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대내적 측면의 자발적인 통합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족들간의 융합을 가능케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억압하는 나라의 노동운동은 피압박민족의 自決權을 인정해야만 그것이 피압박민족의 敵意나 의심을 해소시켜 부르조아계급에 대한 국제적 투쟁에서 양국의 프롤레타리아를 단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³²⁾

그렇다고 레닌이 민족자결권을 절대적 원칙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그가 “민주적 요구들이 고립적으로 고찰되어서는 안되며 세계적 규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계급의식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민주적 요구는 사회주의라는 보다 높은 이해에 종속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레닌이 주장했던 것은 민족자결의 “자연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의 “저항권”이었다.³³⁾ 그리하여 레닌의 민족이론의 핵심은 계급투쟁과 세계혁명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저해

32) 레닌, “레닌의 민족문제론,” Karl Marx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pp. 167~313.

33) 호러스 데이비스(Horace B. Davis), “레닌과 마르크스주의의 민족이론의 공식,” 임지현 역,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p. 201.

하는 한 민족주의는 부르조아 또는 개량주의로 낙인찍어 배격하는 것이다. 레닌의 民族自決原則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긴장도 바로 여기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³⁴⁾

맑스에 비해 레닌이 민족주의 문제를 매우 중요시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문제에 관해 스탈린은 레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저술을 남겼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와의 관계는 스탈린에 의해 이론적으로 집대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12년 레닌은 스탈린에게 민족문제에 관한 pamphlet을 쓰도록 위탁했으며, 여기에는 스탈린이 그루지아인이라는 사실이 작용했다. 그러나 레닌이 볼셰비키혁명의 성공을 위해 민족자결 원칙에 비교적 충실했다면, 스탈린은 소련의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슬라브 민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중국에 가서는 레닌을 왜곡하고 부정했다. 레닌이 수행했던 러시아혁명은 민족들을 억압하는 러시아제국을 파괴함으로써 민족자결의 전망을 밝게 펼쳤으나, 1924년 레닌 사후 스탈린은 소련내 제민족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억압하는 非自治的 中央集權體制를 지향했던 것이다.³⁵⁾

34) 박용수,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레닌·스탈린의 시각을 중심으로,” 신용하 편, 『민족이론』, pp. 59~81.

35) 스탈린, “스탈린의 민족문제론,” Karl Marx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이론』, pp. 313~53; Stephen K. Carter, *Russian Nationalism: Yesterday, Today, Tomorrow* (London: Pinter Publishers, 1990), pp. 43~54.

스탈린은 민족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그에 의하면 민족은 언어, 지역, 경제생활, 그리고 문화의 4가지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공동체로서, 위의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하면 민족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련방내 소수민족의 독자성과 자치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스탈린은 또한 대러시아의 억압적 민족주의와 피억압적 민족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 등지의 소수민족을 유럽·러시아 프롤레타리아의 同化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는 사회주의혁명 과정에서 피억압민족의 농민대중을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동맹군으로 파악한 레닌과는 대조적인 발상이었다. 스탈린에게는 민족국가로서의-혹은 짜르제국의 후계국가로서의-소련의 확립이 더욱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이다.³⁶⁾

스탈린이 이와 같이 中央集權的 民族主義를 통하여 레닌과 이론적으로 결별한 것에는,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막으면서 안으로는 혁명의 성공적인 완수를 추진해야만 했던 당시의 사정이 작용했다. 상황의 논리가 원칙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다.³⁷⁾ 스탈린의 중앙집권적 정책은 소련에서 사회주의의 확보와 건설에 최우선적 목표를 두었던 소위

36) 湯淺越男 著, 조용범 옮김, 「민족문제의 사적구조: 계급과 민족의 변증법」(서울: 한울, 1985), p. 214.

37) 임지현, “사회주의 민족이론과 민족문제,” p. 254.

‘일국 사회주의’ 테제가 의해 정당화되었다. 이로써 “노동자는 조국을 갖지 않는다”는 테제가 오히려 세계주의라고 비판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레닌의 新經濟政策이 폐기되고 당내부의 다원주의 정치가 막을 내린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스탈린이 소련내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정치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을 ‘대조국전쟁’의 이름으로 싸웠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탈린은 소련내 민족문제를 외면하는 반대급부로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견지한 것이 아니라, 大러시아 민족주의를 고양시켰던 셈이다.³⁸⁾

3. 帝國主義와 第3世界 民族主義

유럽산 민족주의는 근대 국민국가의 발전에 상응하면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결합했다. 국민국가의 형성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발전의 시점과 속도도 나라마다 균일하지 않았다. 앞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혁명을 선도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였고, 독일이나 이태리 등 후발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위한 富國強兵 이데올로기였

38) Horace B. Davis,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pp. 99~105.

다. 민족주의는 근대 국민국가의 발전에 상응하면서 산업화의 정신적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국민국가의 형성과 자본주의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주의는 고향인 유럽을 떠나 19세기에 들어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무산자 혁명에 의한 민족개념의 타파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구현이 이루어지 않은 대신, 자본가계급에 의한 世界經濟體制가 형성되는 것과 병행하여 민족개념이 비유럽지역에 전달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 서구의 제국주의는 비서구지역에서 민족주의를 촉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로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제국주의는 영토의 확정과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구축, 그리고 통일된 국민경제권의 형성 등과 같은 민족주의의 외형적, 객관적 요소들을 정비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對外的 帝國主義化는 민족주의에 ‘양면성’을 부과했다.³⁹⁾ 다시 말해 그것은 세계적 규모에서 ‘불균등 발전’을 초래했는데,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게는 발전을, 그리고 비서구 지역에게는 저발전의 상태를 동시에, 그리고 상호인과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다. 식민지화에 의한 독립상태의 훼손과 저 발전을 유도하는 구조적 상황에 대처하여 비서구사회에서는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39) 톰 네언, “민족주의의 양면성,”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pp. 220~61.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민족주의 개념 그 자체는 국제사회에서 중심부와 주변부간의 갈등과 대결을 동반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일본과 같이 일찌기 선진 자본주의사회를 ‘모방’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민족주의를 부국강병을 위한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여 그 스스로 地域的 帝國主義 國家가 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방’이 불가능했던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 변방 국가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의 방식으로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 국민국가의 발전과 산업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이 ‘역사의 지름길’을 향해 그들의 사회를 동원해야만 했을 때, 이는 곧 지배적인 외세에 맞선 자신의 독립된 주체를 강력하게 자각하게 만드는 戰鬪的이고 超階級的인 共同體를 의식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⁴⁰⁾ 제국주의의 침략 앞에 놓인 주변부 국가의 경우 사회적 동원을 위해 필요한 근대적 정치·경제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있는 것은 물려받은 종족, 언어, 민속, 피부색과 같은 그 지역의 특징들 뿐이었다.

抵抗的 民族主義를 지향했던 비서구지역의 반제국주의는 민중주의와 인텔리겐차 주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민중이라 함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이전의 상

40) 위의 논문.

황에서 보여지는 초계급적 민족공동체이다. 다시 말해 비서구지역의 민족주의는 반드시 민주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유일한 대상으로서 민중을 상징하고 民衆主義를 지향했던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민중을 동원하고 민족주의를 고양한 세력은 전근대국가의 권력담당자나 부르조아계급이 아닌 신흥 인텔리겐차들이다. 이들은 민족주의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통로에서 불가피하게 거쳐가는 것임을 선각자적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독립에 의한 식민주의의 극복과 국민국가의 건설, 그리고 산업화를 위해 민중을 위로부터 계몽하고 동원하고자 했던 세력인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先·後發 帝國主義國家들간의 내분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은 흔히 세계사에서 ‘민족의 원칙’ (principle of nationality)이 승리한 시점으로 간주된다.⁴¹⁾ 베르사이유조약은 세계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민족국가 단위의 국가체계를 기정사실화했으며, 비서구지역에서는 민족을 단위로 한 해방과 독립운동이 서구 민족주의에 맞서 거세게 대항했다. 그리고 그 배경은 道德的 理想主義에 입각한 민족자결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단명으로 끝났고, 국민국가들의 내연적 갈등은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지속되었

41) E. J. 홉스봄(Eric J. Hobsbawm),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p. 172.

다. 한편, 20세기 들어와 지정학적 세계체계의 중심은 탈유럽화를 모색했다. 그것의 계기는 미국이 세계자본주의의 중심국가가 되고, 러시아가 사회주의의 종주국으로서 소련으로 바뀐 사실이었다. 두 패권국가간의 정치·군사적 대립은 그러나 나치즘과 파시즘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잠정적으로 공존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비서구지역의 민족주의운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帝國主義는 정치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그 이후 '제3세계'라고 불리게 된 지구상의 넓은 지역에서 민족국가의 숫자를 폭발적으로 증대시켰으며, 식민주의의 유산이든 반제국주의 투쟁의 결과이든, 민족국가 이외의 대안적 정치공동체는 그 곳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민족국가와 민족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슬러 갈 수 없는 역사의 대세로서 전세계적 규모로 정착된 것이다. 1946년에 결성된 국제연합은 국민국가가 현대사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단위임을 과시했다. 1980년대 후반 세계체계의 대변혁 이후 작금에 회자되는 민족주의 시대의 脫近代的 終焉 命題 혹은 국민국가의 몰락 테제는 유럽의 국지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후진지역은 아직도 민족주의의 내실화와 국민국가의 건설이라고 하는 전근대적 또는 근대적 과제에

매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관찰이라고 하겠다.⁴²⁾

전후 제3세계 민족주의는 중심부 국가의 이익에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민족국가 단위의 중심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을 계속하기 위해 민족주의 보다는 國際主義를 선호했다. 그 결과 불평등한 종속관계에 입각한 국제적 분업구조는 확대재생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3세계의 민족주의는 지정학적 및 경제적 세계체계라고 하는 대외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대내적 통치구조와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 전형적인 종속관계를 의미하는 新植民主義는 민족주의를 명목상의 가치로 전략시키면서 국가엘리트와 지배계급이 세계체계의 이익에 편승하여 경제적 저발전 상태를 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新從屬主義는 국가의 역할에 따라 제3세계 지역에서 민족주의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제3세계 가운데서도 민족주의가 보다 강력하게 발현한 곳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진영이 아니라 사회주의권이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탈린 시대에 들어와 소련은 세계혁명의 근거지 혹은 국제프롤레타리아의 조국으로서의 성격을

42) 전상인, “국민국가는 살아있다,” 『대화』, 2 (1994), pp. 86~95.

상실하고 일개 민족국가로 전락했다.⁴³⁾ 제3인터내셔널 혹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소련의 주도에 의해 1919년에 창립되어 1943년에 해체될 때까지 민족문제를 사회주의 세계혁명의 전면에서 놓고 고민했다. 여기서도 당시 ‘동양’이라고 통칭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준)식민지사회의 사회주의운동이 주요 현안이었다. 문제의 초점은 그곳의 사회주의운동이 민족해방을 위해 민족부르조아와 어떻게 실천적으로 결합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개념이 득세하는 가운데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民族解放運動간의 관계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

제3인터내셔널이 실패로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사회주의혁명의 진원지는 오히려 제3세계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맑스주의가 민족주의적 열망과 강력하게 결합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적’ 민족들이 사회주의적 大義의 새로운 담지자로 등장함에 따라 일찌기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과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민족”으로 구분했던 맑스의 주장은 역으로 반박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⁴⁴⁾ 모택동이 승리로 이끈 중국혁명을 필두로 하여 베트남, 유고, 쿠바

43) 湯淺赳男 著, 조용범 옮김, 「민족문제의 사적구조」, p. 203.

44) 로날도 몽크, 이원태 옮김,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주의」, p. 195.

등지에서는 사회주의가 抵抗的 民族主義와 실천적으로 융합되었다. 이곳에서는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자본주의 세계체계와의 단절이 시대적 과업으로 제시되었다. 소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동유럽의 사회주의건설도 비록 민족주의적 정서의 강도는 떨어졌지만, 그 단위는 역시 민족국가였다.

第Ⅲ章 北韓 社會主義革命的 民族主義的 土着化

1. 北韓 社會主義의 民族主義的 定向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한반도는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한반도를 남북한으로 분할·점령하였고 북한에서는 社會主義 體制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회주의 이행을 곧바로 착수한 것도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편향했던 것도 아니다. 정권 수립 초기 북한은 이념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세계혁명을 기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일제 식민지 유산의 척결과 한반도 통일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으면서 민족국가라고 하는 政治的 形式의 完成을 추구했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적 지향은 물론 당대의 사회주의 건설이 즉흥적으로 제기한 사태발전은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조선조 멸망을 전후하여 생성되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그 역량이 축적된 한국 민족주의 운동이 해방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해방공간은 民族

主義的 情緒로 크게 고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제3 세계에서 흔히 보여지듯이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쉽게 결합했고, 자본주의 세계체계와의 단절을 통해 반제국주의 노선을 취하고 자주적 발전노선을 정립함으로써, 한말 이래의 저항적 민족주의의 속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었다.

물론 당시 김일성이 민족주의를 공언했던 것도 아니고 그 자신 그럴만한 처지에 있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소련의 북한 점령이라는 외생적 변수와 함께 사회주의 혁명의 大義가 민족주의라는 언술을 원칙적으로 금기시켰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따라서 민족주의라는 단어의 사용을 유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을 줄곧 경계하는 입장에서 있었다.⁴⁵⁾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어떤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공산주의자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고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공산주의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⁴⁶⁾ 1948년 5월에 방북한 김구와의 회동에서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조국

45) 김일성,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건설에 대하여 (각 도당책임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45.10.13),”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329~38.

46) 김일성, “해방된 조선은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 (신의주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45.11.27),” 위의 책, pp. 449~58.

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함으로써⁴⁷⁾ 民族主義者와 共產主義者간의 공통분모를 발견하려고도 했다.

소련을 비롯한 다른 현존사회주의체제가 다 그랬던 것처럼 북한도 사회주의를 민족주의의 용기에 담으려고 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와는 달리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항일무장투쟁에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민족주의의 언술이 없이도 民族主義的 情緒는 국가 건설기에 사실상 크게 고무되었다. 대표적으로 김일성은 식민지 상태를 벗어난 상황에서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국”이라고 못박았다.⁴⁸⁾ 당시 그는 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도 민족애와 애국심은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⁴⁹⁾

47) 김일성, “김구와 한 담화 (1948.5.3),” 「김일성저작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294~304.

48) 김일성, “새 민주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업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에서 베푼 환영연에서 한 연설, 1945.10.18),” 「김일성저작집 1」, pp. 361~64.

49) 김일성, “민족운동가들과 한 담화 (1945.11.5),” 「김일성저작집 1」, pp. 388~93.

김일성은 日帝時代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解放以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수행을 통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의 긍지를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⁵⁰⁾ 곧, “식민지노예근성과 낡은 봉건적 관념”의 철저한 숙청, 그리고 “자주적인 립장”의 견지에 의한 “완전한 민족적독립”의 추구를 통해 “조국의 튼성한 발전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⁵¹⁾ 이를 위하여 그는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이라는 슬로건을 애용했다. 다시 말해 “전민족적리익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이에 복종시키는 원칙”하에서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가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과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말고 하나로 굳게 뭉쳐 건국사업에 떨쳐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덧붙여 김일성은 “민족산업” 혹은 “민족경제”의 건설과 “민족군대”의 양성, 그리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자주, 그리

50)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한 연설, 1945.8.20),” 「김일성저작집 1」, pp. 250~68.

51) 김일성, “새조선 건설과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업 (지방에 파견되는 정치공작원들과 한 담화, 1945.9.20),” 「김일성저작집 1」, pp. 269~79; 김일성,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 (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앞에서 한 강의, 1945.10.3),” 「김일성저작집 1」, pp. 280~303.

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⁵²⁾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해방 직후 북한이 社會主義 革命 보다는 民族主義 革命의 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아니면 최소한 북한이 일국 사회주의혁명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선행시켰던 것만은 분명하다. 김일성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적 노선은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共生關係에 놓여있는 것이며,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이익은 개별 국가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이해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때 가장 잘 실현되는 것이었다. 그는 “진정한 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분리될수 없으며 부르조아민

52) 김일성,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에서 한 보고, 1945.10.10),” 「김일성저작집 1」, pp. 304~28; 김일성,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220~26; 김일성, “민주주의조선림시정부를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 할 것인가 (북조선민전산하 정당, 사회단체 열성자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304~20; 김일성, “조국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기 위하여 (홍남지구인민공장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165~70;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81~86 등을 볼 것.

족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상반된다는것을 확신”했다.⁵³⁾

2.北韓의 社會主義革命과 韓國戰爭

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1945년 8월, 북한의 최고실력자로 부상한 김일성은 3대 당면 과업으로 建黨과 建國, 및 建軍을 제시했다.⁵⁴⁾ 이 가운데 “중앙주권기관” 수립을 목표로 한 건국사업은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박차를 가했다. 그것은 해방 정국에서 출현했던 北韓 單獨政權의 원형이었고 1948년 9월에 정식으로 수립된 근대적 사회주의 민족국가,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밑바탕이었다. 또한 이때 형성된 북한체제의 基本構造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불변으로 남아있다.⁵⁵⁾ 김일성에 의하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어떤 외국의 정치적간섭에 의하여 외국으로 부터 수입된 정권형태인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우

53) 김일성,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 (1952.4.25),” 「김일성저작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70~82.

54)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

55)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293.

리 민족 자체가 창설한 것”으로, 그것은 “해방된 조선민족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인식되었다.⁵⁶⁾

그러나 김일성이 주장하는 건국과정에서의 自主性은 비판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동안 김일성의 권력장악 과정을 설명하는데는 그동안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기도했던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과⁵⁷⁾ 김일성 스스로의 노력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으나,⁵⁸⁾ 북한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보여진 소련의 영향력이 “핵심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였음은 점차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⁵⁹⁾ 사실상 김일성은 소련에 대해서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을 성의껏 도와주는 이웃나라”로 인식했다. 또한 그는 “쏘련과의 친선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 의로운 벗에게 너무 수고를 끼치지 말고 우리자체의 힘으로 하루속히 새 정권을 세워야”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⁶⁰⁾ 이는 김일성에 의한 건국 노력이 의지면에서는 자

56) 김일성, “8·15 해방 2주년 평양시 기념대회에서 한 보고 (1947.8.14),” 「김일성저작집 3」, pp. 369~91.

57) Suh, *Kim Il Sung*; Scalapino and Lee, *Communism in Korea* 참조.

58)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 & II* 참조.

59) Hak Soon Paik,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Vol. I & II,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볼 것.

60) 김일성, “새 민주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업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에서 배훈 환영연에서 한 연설, 1945.10.18),”

주적이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련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발족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은 1947년 초까지 대대적인 ‘위로 부터의 사회혁명’을 추진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土地改革이었다. 1946년 3월 5일에 발표된 「북조선토지에 관한 법령」은⁶¹⁾ 기존 봉건적 사회질서의 물적 토대를 와해시키는 신호탄이었다. 이어서 같은 해 6월 24일에는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 법령」이, 7월 30일에는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그리고 8월 10일에는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이 각각 공포되었다.⁶²⁾ 이로써 북한은 기존의 전통적 사회관계를 해체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法的·制度的 基礎를 마련했다. 이어서 1948년 9월 8일에 발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은 비록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신분과 계급 및 성별의 차이를 불문하는 人民主權 代表原理를 완성시켰다.

따라서 북한이 1940년대 후반의 획기적인 사회개혁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통치유산을 극복한다는 점에

「김일성저작집 1」, pp. 361~64.

61) 「김일성저작집 2」, pp. 101~04.

62) 위의 책, pp. 273~79, 327~28, 338~39.

서는 반제국주의적이었고, 그와 더불어 전통사회의 봉건적 잔재를 일소한다는 점에서는 반봉건적이었으며, 노동자·농민계급을 중심으로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민주주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연관하여 커밍스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이 “혁명적·민족주의적 조합주의”(revolutionary nationalist corporatism)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았다.⁶³⁾ 한편 비교·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북한과 비슷한 내용의 사회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에서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중국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서, 스카치폴이 지적하듯이 그 궁극적인 정치적인 결과는 한결같이 國家權力의 強化였다.⁶⁴⁾

나. “조국해방전쟁”

‘성공적’인 반제반봉건사회혁명의 추진과 강화된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하여 김일성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주체세력임을 자임했다. 그는 남한을 단순히 “미제국주의”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민족통일의 문제 역시 帝國

63) 그것은 스탈린식의 중앙집중제, 모택동의 대중노선, 한국의 유교적 전통과 일제의 식민지 통치술 가운데 쓸모있고 필요한 것들만 화학적으로 종합한 결과였다.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I*, p. 293.

64)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참조.

主義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했다. 김일성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며 그것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에 창설된 민주기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⁵⁾ 그는 이미 1948년에 “조선민족의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겠다고 다짐했고⁶⁶⁾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해 武力增強에 박차를 가했다. 1950년 초에 김일성이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강조할 무렵⁶⁷⁾ 북한의 對南 戰爭準備는 사실상 끝났다.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조선민족의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겠다는 김일성의 언명에도 불구하고⁶⁸⁾ 그의 “조국해방전쟁”이 준비과정에서부터 전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소련이나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형제국”들의

65) 김일성,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모든 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결론, 1948.3.29),” 「김일성저작집 4」, pp. 245~60.

66) 김일성, “모든 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67) 김일성, “1950년을 맞이하여 공화국 전체인민들에게 보낸 신년사 (1950.1.1),”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52~57.

68) 김일성, “모든 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강력한 지원에 의존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는 전쟁의 시작에 앞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승인과 지원을 약속받았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불리해진 상황에서는 중국 인민지원군의 결정적인 도움에 의해 극적으로 回生했다. 따라서 김일성이 전시 및 전후상황에서 기존의 민족주의적 기개를 유보한 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새삼 강조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非自主的 對外路線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의 결과였을 것이다.

1952년에 김일성은 “진정한 애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분리될 수 없으며 부르주아민족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상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인민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형제나라 인민들과 굳게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⁶⁹⁾ 또한 전쟁이 끝난 뒤 복구과정에 참여하고 있던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역할을 김일성은 “전세계로동자들의 국제주의적의무”라고 말했다.⁷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약소국가들에 대한 강대국의 침략과 정복,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국가

69) 김일성,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 (1952.4.25),” 「김일성저작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70~82.

70) 김일성, “5·1절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54.5.1),”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82~84.

들의 략탈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세계의 국제관계와는 달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해 있다고 설명했다.

3. 社會主義革命期 北韓 民族主義의 評價

1945년의 해방으로부터 1950~1953년의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社會主義革命은 내용상 민족주의 운동과 크게 중첩되어 있다. 북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물론 일정한 과도기를 거친 다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배격을 통한 대외적 민족자결권의 확립과 강력한 국가 건설에 의한 대내적 주권의 확보, 그리고 半봉건적 사회구조의 해체에 의한 민족경제의 형성을 지향했다는 의미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의 보편적 진로에 매우 근접해 있다. 더욱이 북한은 사회주의혁명이 라는 형식을 빌어 이와 같은 사실상의 民族主義 革命을 단기간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리고 이는 북한 사회주의의 민족주의적 기초 혹은 민족주의적 토착화를 설명하는 주요 단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기 북한의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의 민주적 차원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혁명 이후 소련이나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역시 기존의 피지배계급을 역사상 처음

으로 ‘국민정치’ (national politics)의 장에 흡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사회주의혁명 과정에서 국가가 對內的 正統性的 확립을 위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만큼 북한 민족주의의 민주적 측면은 실질적인 것이 되지 못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건국 이후 민주주의가 아닌 獨裁體制를 지향했다는 사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기에 있어서 북한의 민족주의가 추구한 민족통합의 원칙도 제한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우선 민족범주의 설정에 있어서 김일성은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 결집을 호소하면서 실제로는 “무원칙한 <대동단결>”을 지양했다.⁷¹⁾ 그에 의하면 인민정권 수립에 있어서 “제국주의 잔재세력”인 친일파, 민족반역자, 반동적인 지주, 예속자본가 등은 철저히 배격해야 할 대상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반제국주의적이고 탈식민지적이었던 당시의 시대적 대세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일

71)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김일성,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1946.3.7),” 「김일성저작집 2」, pp. 113~14. 이는 당시 이승만이 제시한 “뭉치면 살고 흩으지면 죽는다”는 식의 대동단결 원칙과 대조적이다.

성이 제시한 민족통합의 원칙은 분명히 국가가 농민과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피지배계급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그 중심이 놓여 있었다.

그 결과 북한의 민족주의는 초계급적인 민족통합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階級的 偏向性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민족주의의 민중적 차원으로 해석해서도 안된다. 서구의 민족주의 발달사를 보면, 부르조아계급이 선도한 민족주의가 산업혁명 이후 본래의 계급적 기초로부터 점차 탈피하여 노동자계급 등 피지배계급의 정치적 투쟁을 거친 다음 시민권의 확대를 인정하는 정치적 형식으로 점차 발전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차원과 아울러 민중적 차원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민권>과 <민주>개념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민주주의를 “부르조아민주주의”로 일축했다. 그 대신 김일성은 “참다운 민주주의”로서의 “진보적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⁷²⁾ 길으로는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를, 내용적으로는 김일성 唯一支配體制에 의하여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를 확립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 결과 북한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권위주의적이고도 반자유주의적인 정치체제로 귀결된 것이다.

72) 김일성,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

김일성은 또한 해방 전까지 한국을 지배하던 일본과, 해방 이후 남한의 정권수립을 후견하던 미국을 비판하면서 반제국주의적 배타성을 내면화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민족주의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함께 제3세계내 저항적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세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식민주의와 냉전체제에 맞대결을 벌이는 민족자주권의 명분으로 國際的 孤立을 자초하여 민족주의의 대외개방적 성격을 간과했다. 동시에 북한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에 대해서는 자주적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다. 해방공간에서 민족독립국가를 건설할 당시 북한이 소련에 의존했던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북한은 신탁통치 실시를 위한 연합국들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입장에 섰다. 그리하여 표면적인 반제국주의·반외세 노선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 있어서 북한의 저항 민족주의는 部分的인 것에 불과했다.

사회주의혁명기 북한은 또한 민족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한을 征服의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물론 이탈리아나 독일 민족주의의 발달과정에서 보듯이 민족주의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민족통일을 위해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지원으로 남한의 동족을, 그것도 무력으로 병합하고자 기도함으로써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 이

런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관련하여 북한이 취한 武裝 민족주의 노선 역시 자기모순적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저항적 민족주의의 논리에 따라 민족통일을 주장하면서 민족의 반쪽을 적대시켰기 때문이다. 덧붙여 북한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필요와 상황에 따라 민족주의 노선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김일성은 자주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주의적 일국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지원이 요구되는 국면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새삼 강조하면서 그것과의 협력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돌이켜 볼 때, 사회주의혁명기 북한은 한편으로는 한말 이래 전통적인 韓國 民族主義의 반제국주의적이고 저항적 속성을 부분적으로 승계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문제를 놓고 북한은 맑스와 엥겔스보다 레닌의 이론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면한 사회주의혁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민족주의를 정치적 에너지의 저장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를 민족주의의 그릇에 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일성이 이해한 민족주의는 부르조아 민족주의로서 사회주의혁명을 추진하던 북한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결국 민족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言述로써 발견한 것은 ‘민족애’

나 ‘애국주의’ 혹은 ‘민주주의’⁷³⁾ 등의 용어로서,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類似 레토릭을 통해 민족주의를 사회주의 노선에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타협적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일국사회주의’ 테제를 보다 선호하고 강력한 中央集權的 統治體制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레닌보다 스탈린을 더욱 더 추종했다고 볼 수 있다. 레닌의 민족자결원칙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주의간의 기본적인 긴장이 존재했으나 스탈린은 슬라브 민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민족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 것도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의 참가를 “대조국전쟁”으로 말한 사실을 연상시킨다. 결론적으로 해방에서부터 한국전쟁까지 북한이 추구했던 사실상의 민족주의는 반봉건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산자계급 중심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 민족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켰으며, 또한 국제적

73) 예컨대 북한의 ‘진보적민주주의’는 “자주성에 기초하는 민주주의, 다시말하여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예속되는것을 반대하며 자기 나라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로 판단하고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과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민주주의”로 풀이되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족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170.

으로 서방 자본주의사회에 대해서는 排他的이고 사회주의권에 대해서는 機會主義的이었다는 점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第Ⅳ章 北韓 社會主義建設과 民族主義의 內面化

1. 北韓 社會主義의 浮沈과 主體思想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북한 사회주의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첫째로 한국전쟁에서의 ‘패전’은 김일성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둘째로 전쟁으로 인하여 북한전역은 초토화되었고, 그 결과 인적·물적 자원이 대거 고갈되었다. 셋째, 북한은 ‘戰犯’ 國家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다. 넷째,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에 나타난 사회주의권의 내부적 동요도 북한 정권에 대한 유해한 환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국면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였고 個人的 權力強化와 사회주의 건설의 박차를 위한 그의 기도는 성공적이었다.

우선 권력구조에 있어서 김일성은 ‘패전’의 책임전가를 통해 잠재적 내지 사실상의 정적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여 권력을 보전하고 강화했다. 한국전쟁의 북한내 國內政治的 意義는 김일성이 국가권력을 결정적으로 독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⁷⁴⁾ 또한 소련에서 1953년 스탈린 사후 그에 대한 격하운동이 벌어지고 중국과 소련간의 理念紛爭이 시작될 무

렵에 발생한 북한 권력층의 동요도 김일성은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1956년 8월에 발생한 소위 '8월종파사건'을 계기로 하여 김일성에 대한 정치적 도전은 북한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하여 “당발전의 견지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를 청산하고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완전한 통일”이 실현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⁷⁴⁾

한국전쟁은 또한 결과적으로 북한 사회주의 건설을 가속화하는 促進變數로 작용했다.⁷⁵⁾ 북한의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개조는 1946~1950년의 평화기간과 1950~1953년의 전시 기간에 축적된 선행적 조건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나, 전쟁의 폐허는 사회주의 건설의 재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전후 북한의 1950년대는 계획경제에 의한 전후복구 및 경제발전이 착수된 때였고 이와 함께 생산양식의 전면적인 사회주의적 개조가 추진되었다. 생산수단의 집단화 및 국유화를 근간으로 한 북한에서의 생산양식의 社會主義的 改造

74) 고병철, “한국전쟁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pp. 10~17; Suh, *Kim Il Sung*, pp. 95~120.

75)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392.

76)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의 사회구조 변화,”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pp. 163~98; 김귀옥,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당과 인민대중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서울: 풀빛, 1992), pp. 329~59.

는 “전후 4~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비교적 순조롭게 그리고 철저히 수행”되어 1958년경에 그 사업이 완수되었다.⁷⁷⁾ 또한 1954년부터는 3개년 인민경제계획이, 그리고 1957년부터는 1차 5개년계획이 각각 착수되었다.

1950년대에 김일성은 권력기반의 공고화, 사회주의 건설의 조기 달성, 그리고 범세계적인 사회주의권 동요의 파급효과 차단 등을 위해 “사상사업에서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을 개시했다.⁷⁸⁾ 특히 스탈린 격하운동이나 개인우상화 비판, 소련의 수정주의화와 헝가리 사태에서 보여진 동구사회주의의 내부적 갈등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것의 여파가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상적 방벽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社會主義圈의 內部變化를 “제국주의의 사주”와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으로 인식하고 “만일 우리당과 당원들이 사상적 단련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온갖 반맑스주의적 사상적 관점 경향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⁷⁹⁾ 그리고 흐루시초프가 김일성에 대한 偶像

77)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p. 359, 39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61. 9.11),”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57~316 참조.

78)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392.

79) 김일성,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40주년 경축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회의에 참가한 우

崇拜를 비판한 것에 대하여 북한은 “소위 ‘개인숭배반대’ 운동을 다른 당에 내려먹이려 하고 그것을 간판으로 해서 형제당, 형제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⁸⁰⁾

“주체를 세우기 위한 …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1955년⁸¹⁾ 말, 김일성은 혁명의 방식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이론이나 모델이 아닌 “조선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자는 것과, “혁명적군중관점”을 도입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설을 했다.⁸²⁾ 김일성에 의하면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교조주의의 과오를 범하게”될 것이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구체적조건, 우리의 민족적특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혁명적군중관점”이란 官僚的 形式主義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중을

리당 및 정부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 (1957.12.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pp. 37~45.

80) 김일성,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10.28.

81)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342.

82)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55. 12.28),”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67~95.

쟁취해야”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조선의 혁명전통”을 전승하자는 주장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북한체제의 역사적 정통성의 뿌리로 간주하고 대외적으로 自主的 原則을 천명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면서” 싸우는 것을 “부질없는 일”로 치부하고, “밥을 먹는데 바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또는 숟가락으로 먹든 저가락으로 먹든 상관할바”가 아니며 “어떻게 먹든지간에 입에 들어가는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다.⁸³⁾ 이런 점에서 “조선의 혁명전통”과 연계된 주체이론은 주로 政治的 目的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비해 “혁명적균중관점”은 상대적으로 균중노선을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8월, 북한은 경제발전의 기본노선을 ‘중공업 우선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으로 규정했다.⁸⁴⁾ 그리고 북한은 이 전략을 구체적

83) 위의 논문.

84) 엘렌 브룬·재퀴스 허쉬, 「사회주의 북한: 북한 경제발전 연구」(서울: 지평, 1988), pp. 65~92; Byoung-Lo Philo Kim, *Two Koreas in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of Principles and Strategies of Capitalist and Communist Third World Development*

으로 실천할 방법으로 ‘자력갱생 원칙’을 제시했으며, “혁명적군중노선”이란 부족한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기 보다는 생산의 主觀的 要因의 강조를 통한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대고조”를 겨냥한 것이었다.⁸⁵⁾ 그 대표적인 것들이 ‘천리마 운동,’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그리고 각종 ‘속도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군중노선은 반드시 경제적인 목적에 연관된 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것은 김일성의 統治術이기도 했던 것이다.⁸⁶⁾

북한 현대사에서 1950년대 후반은 “사상사업에서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매우 강화”된 시기였다.⁸⁷⁾ 이어서 1960년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결정적투쟁이 전개”되었다.⁸⁸⁾ 1965년 4월에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92), pp. 137~39.

85) 김일성, “현시기 당조직원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조직원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6.11.25),”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76~94; 브룬·허쉬, 「사회주의 북한: 북한 경제발전 연구」, pp. 125~50; Suh, *Kim Il Sung*, pp. 141~51 참조.

86)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pp. 75~92.

87)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392.

88) 위의 책, p. 456.

립장”이라고 말하면서 主體理論에 대한 체계화를 처음 시도했다.⁸⁹⁾ 그리고 1967년 5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는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⁹⁰⁾ 또한 같은 해 7월 6일 김일성이 “전당이 하나의 사상,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이에 기초하여 단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최초로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⁹¹⁾

주체사상이 1950~1960년대 북한 사회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체사상을 통하여 북한은 한국전쟁의 폐허로부터 경제건설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고, 김일성 唯一支配體制를 확립하며 또한 사회주의권 동요의 여파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소분규를 틈타 對外的自主性を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체제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은 그 철저성과 속도에 있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앞질렀다. 전후 복구 3개

89)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1965.4.14),”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78~329.

90)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432.

91) 김일성, “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144~85.

년계획과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북한의 경제적 생산력은 크게 비약하였으며, 그 견인차는 공업생산력이었다.⁹²⁾ 스스로의 평가에 의하면 북한은 1950년대 말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가 되었으며, 이어서 1970년에는 “사회주의 공업국가”임을 자임했다. 그리하여 1960년대는 社會主義 建設에 대한 자신감이 북한에서 절정에 달했던 연대였다.

마침내 북한은 1970년에 제5차 당대회를 열고 1950~1960년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⁹³⁾ 제5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했고, 같은 대회에서 김일성은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공고화”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⁹⁴⁾ 이어서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제정”하여⁹⁵⁾ 1972년에 12월에 공포한 「사회주의헌법」 역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

92) 브룬·허쉬, 「사회주의 북한: 북한 경제발전 연구」, pp. 167~79; 황의각, 「북한경제론」 (서울: 나남, 1992), pp. 115~16 참조.

93)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458.

9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25」, pp. 232~56.

95)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468.

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기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1970년대에 들어와 주체사상은 따라서 당 차원을 초월하여 全國的, 全社會的 水準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주체사상은 질적으로도 변모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의 이른바 ‘4개 노선’ 중심의 ‘지도적 원칙’으로부터 주체사상은 보다 독자적이고 보다 심오한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로 격상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주체사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처럼 어떤 급격한 국내외 정세변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對中·蘇 獨自性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는 점과, 국내적으로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공고화되고 김정일의 후계자적 지위가 공식화되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⁹⁶⁾ 특히 김정일의 부상 은 주체사상의 양적 확산과 질적 전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주도하면서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앞장섰으며,⁹⁷⁾ 1974년 4월 14일에 조선로동당 제5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는 김정일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전원회의 결의형식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96) 金淵珩, “金日成 主體思想에 관한 研究,” p. 55.

97)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p. 474~75.

김정일은 특히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확립과 자신의 후계자적 위치의 공고화를 꾀하는데 주체사상을 이용했다. 맑스·레닌주의와의 사상적 결별을 의미하는 주체사상의 理論的 變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수령론”과 “후계자론”이다. 전자는 김정일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서 제기된 것처럼 김일성의 절대성과 무오류성에 입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후계자론”의 경우는 수령에 대한 충성과 그 후계자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결국 주체사상은 1970년대에 이르러 창조적인 “철학적 원리”로 격상되면서 그 주요 성격이 김일성 유일체제와 부자간 권력세습을 합리화하는 이론체제로 점차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강화와 질적 변모에도 불구하고 1950~1960년대와는 달리 1970년대 이후 북한의 社會主義 經濟發展은 주춤했다. 1971년에 소위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에 착수한 북한은 “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및 각종 “속도전” 등을 통해 기존의 균중노선을 강화했으나, 자력갱생의 원칙과 이념적·도덕적 인센티브에 의한 생산력 제고 노력은 점차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다. 1970년대 초에 북한이 시도한 制限的 對外開放 政策 역시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발전노선 앞에서 좌절했다. 비록 북한이 인

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을 예정보다 1년 앞선 1975년에 완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목표치는 미달된 상태였으며, 1978년에 제2차 7개년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각각 1년씩의 조정기와 완충기를 가져야 했다는 사실은 197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발전이 처했던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한편, 주체사상의 탈맑스·레닌주의화 혹은 金日成主義化는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기존의 입장이 포기됨으로써 더욱 뚜렷해졌다. 제6차 당대회는 당규약 개정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선언했고, 이와 더불어 당대회는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 시위”하기에 이르렀다.⁹⁸⁾ 그 이후 1980년대의 주체사상은 김정일의 손에 의해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⁹⁹⁾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은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고전적론문”을 발표했다.¹⁰⁰⁾ 또한 1985년에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전 10권이 출간되었다. 이로서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와 역사이론, 그리고 정책노선과 지

98)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531.

99) 위의 책, p. 543.

100)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8~81.

침 등을 하나의 체계속에 포함하는 獨自的인 思想體系의 형태로 완결되었다.

주체사상의 저작권과 해석권이 점차 김정일에게로 이전되고, 그것에 입각하여 김정일의 후계체계가 본격화되던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경제는 더욱 더 악화일로를 걸었다. 북한이 1980년대를 위한 제2차 7개년계획을 수립할 무렵, 경제발전 전략으로서의 자력갱생원리나 혁명적 군중노선, 그리고 중공업우선 원칙 모두가 효율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뚜렷한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 일련의 改革과 開放으로서 경제적 국면타개를 기도했으나,¹⁰¹⁾ 모두가 미봉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서 소위 ‘주체경제’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했다. 1978~1984년의 2차 7개년계획도 지지부진하기는 전기의 그것과 대동소이했고, 1985~1986년은 다시 조정과 준비기간으로 설정되었다.

체제 자체의 위기감과 남한에 대한 패배감이 누적되어 가던 북한에게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世界體系의 大變革은 밖으로부터의 일격이 되기에 충분한 사태발전이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은 북한을 ‘잔존’ 사회

101) Bon-Hak Koo,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pp. 169~99; Kim, *Two Koreas in Development*, pp. 122~23 참조.

주의 국가의 하나로 전락시켰고, 탈냉전화에 의한 資本主義 世界體系의 지구적 완성은 북한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 이 무렵 김정일은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 앞에서 한 담화에서 (소위 7·15 논문) 주체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대중을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된 운명공동체로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⁰²⁾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북한 사회주의가 처한 가중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사상의 또 다른 변신이었다.

2. 主體思想과 民族主義

가. “사회주의적애국주의”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사회주의로의 본격적인 이행에 착수하고 김일성의 권력질주가 가속화될 무렵,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에는 階級論的 色彩가 크게 가미되었다. 전쟁 이전의 사회주의 혁명기에 있어서 북한은 조국, 애국심 등의 용어를 구사하면서 민족범주를 상대적으로 강조하였으나, 한국

102)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p. 544~46.

전쟁이 끝난 뒤 김일성은 계급투쟁이나 계급교양의 문제를 보다 전면에 내세웠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 김일성은 이제 “우리 당의 중국적 목적이 조국통일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전국적범위에서의 사회주의사회의 건설, 나아가서는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있다고 선언하고, 평화시기의 “민주개혁”이 “날카로운 계급투쟁의 환경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조국해방전쟁” 역시 “치열한 계급투쟁의 표현”이었다고 회고한 다음, 향후의 사회주의 건설 또한 階級鬭爭의 環境속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¹⁰³⁾

한국전쟁 이후 이와 같은 계급범주의 상대적 강조는 북한의 민족주의가 북한체제의 본격적인 社會主義的 改造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 볼 수 있다. 1955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주체사상은 따라서 민족주의가 북한의 사회주의적 발전에 용해될 수 있는 이념적 전환의 기초를 마련했던 셈이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한국전쟁 이전의 북한은 ‘민족공산주의’를 사실상 추구하면서도, 민족주의라는 언술을 그대로 차용하는

103) 김일성,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1953.4),”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28~44; 김일성, “사회주의혁명의 현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9」, pp. 284~315.

것에는 사회주의 체제로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뒤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통해 북한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논리적으로 합성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주체에 관한 이론의 下位概念으로 내면화했던 것이다.

주체사상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라는 레닌식 개념을 도입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하여¹⁰⁴⁾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한 階級主義的 世界觀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 근로대중의 계급적이익을 떠난 ‘전민족적리익’을 내세움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기의 진정한 계급적리익과 민족적리익을 자각할 수 없게”함으로써 “결국 계급적모순을 은폐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하는 것으로 비판되었다.¹⁰⁵⁾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나타난 階級性은 주체사상이 추

104)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600~03.

105)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pp. 430~31;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53.

구하는 “혁명적군중관점”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데로 그것은 形式主義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중을 쟁취해야”한다는 주장이다.¹⁰⁶⁾ 여기서 군중이라 함은 “기본군중 즉 노동자, 농민들” 및 그들의 “동맹자들”을 뜻한다. 따라서 “혁명적군중관점”은 주체사상의 階級論的 基盤을 명백히 반영하면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이르게 하는 이론적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계급교양에서 중요한것은 …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다음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 … 인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¹⁰⁷⁾

한편, 김일성은 “진정한 애국주의자는 곧 국제주의자이며 또 진정한 국제주의자는 곧 애국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¹⁰⁸⁾ 북한 민족주의의 國際主義的 性格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106)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107)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노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 이상 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3.2.8),” 「김일성저작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68~136.

108)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¹⁰⁹⁾ 그에 의하면 “원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라는것은 자주적인 민족들, 국가들간의 국제주의이지 민족과 국가를 떠난 국제주의란 생각할 수 없는것”이다.¹¹⁰⁾ 그는 이어 말하기를 “물론 앞으로 제국주의가 완전히 꺼꾸러지고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승리하여 민족들의 계선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진 다음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자기조국과 민족을 잊어버릴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일성에 의하면 “공산주의사상교양에서 중요한 문제”는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사회주의자진영의 모든 나라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적복무는 곧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일치”한다.¹¹¹⁾ 이는 “전체 사회주의진영과 전세계로동계급의 공동이익”이야말로 “매 근로자들이 자기의 사회주의적향토의 건설에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될 때” 최대한 보장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진영이 확

109) 김일성,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11.20),”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580~606.

110)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한다.”

111) 김일성,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대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달성”된다는 것이다.¹¹²⁾ 결국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그 “제국주의적 속성” 때문에 “인민들간의 친선 관계를 파괴”하는 민족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自主的인 連帶를 지향하는 개념인 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개념이 주체사상의 계급론적 및 국제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민족을 자주와 발전의 핵심 단위로 중요시하고 있다. 사실상 주체사상은 계급과 민족을 동렬에 놓고 양자를 공히 ‘사회적 집단’이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階級은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 기본요소이며, 民族은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라는 입장이다.¹¹³⁾ 북한은 오랫동안 민족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는 스탈린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러나 1973년부터 민족의 구성요소에 “혈통”을 새롭게 추가한 사실은¹¹⁴⁾ 나름대로 고유하고도 구체적인 민족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주

112)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10.5),”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pp. 376~469.

113)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58.

114)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p. 423.

체사상은 비록 階級偏向的이기는 하지만 민족 단위 중심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추구했다.

나. 社會主義의 民族自主的 發展

북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가운데 가장 핵심은 自主性의 原則이다. 1955년에 사상에서의 주체가 처음 제기된 이래 김일성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우리자체의 힘”이라고 말하고¹¹⁵⁾ 자주성은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대국주의를 견제”하고 “어떤 <중심>이나 <중양>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당의 신성한 권리”라고 주장했다.¹¹⁶⁾ 이에 따라 김일성은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행한 연설에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선언했으며, 1967년에 발표된 정부정강에서는 사상에서의 주체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자주, 자립, 및 자위의 실천이라고 설명했다.¹¹⁷⁾ 여기에서

115)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62.10.23),”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441~95.

116)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10.5),”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376~469.

117)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사상에서의 主體란 다름 아닌 주체사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주, 자립, 자위는 주체사상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것이 정치·외교, 경제, 군사 분야에서 각각 구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자주, 자립, 자위는 주체의 하위개념이며 자립과 자위는 자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¹¹⁸⁾

自主는 정치, 외교 전반에서 완전한 민족자결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에 대하여 김일성은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전제하고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들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¹¹⁹⁾ 그는 民族統一의 문제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군대가 물러간 조건에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대외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을 견지하여 “누구든지 우리 민족

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12.16), 「김일성저작집 2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481~548.

118) 金淵珏, “金日成 主體思想에 관한 研究,” p. 50.

119)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의 권리와 존엄을 유린하거나 모독하는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自立은 기본적으로 자력갱생 원칙에 의한 민족경제건설을 의미한다. 김일성에 의하면 자력갱생이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을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富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으로 정의되고 있다.¹²⁰⁾ 북한은 이러한 自力更生의 원칙에 의하여 “자립적민족경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면서, 경제적 자립을 정치적 자주의 물질적 기초로 간주했다.¹²¹⁾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자립경제란 대외경제 관계속에서 다른 외국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경제 (autarky)에 가까운 것이다.

한편, 自衛는 국방에서 구현되는 자주와 자립정신이다. 자위에 관해 김일성은 “인민들과 군인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처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하며 ...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에 의거하여 나라를 방위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는 동시에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더

120)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21)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3」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 81~82.

육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¹²²⁾ 여기서 군사력 강화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국토의 요새화, 그리고 무장의 현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의미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체의 무력에 의하여 對南革命戰略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사상에서의 주체를 근간으로 한 정치·외교분야에서의 자주, 경제부문에서의 자립, 그리고 군사방면에서의 자위 등을 의미하는 이른바 “4개노선”은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으로서 1960년대 이후 북한의 民族的 社會主義發展의 길잡이가 되어왔다.

북한은 이러한 “4개노선”을 발판으로 하여 민족적 자주와 남북통일, 그리고 사회·경제발전 문제에 접근했다. 민족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처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해 완전한 자주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천명하고 있는 나라도 세계사에 드물다. 어떤 의미에서 주체사상이 구현하고자 하는 “4개노선” 정신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바로 民族的 自主性의 實踐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집착하는 자주성은 사실상 단순한 지도적 원칙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적 원리로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사회역사 원리로서 역사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

122) 위의 책, pp. 82~83.

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은 민족의 생명을 자주성으로 인식하는 사상으로서 강력한 배타적 내지 저항적 민족주의의 속성을 떨 수 밖에 없다.

民族統一 역시 북한의 주체사상에서는 대외적 자주성 못지 않게 중요성을 차지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조선의 통일 은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의 내부문제”라고 생각했다.¹²³⁾ 북한은 통일문제를 북한 자체의 自主權 確立과 동일한 차원의 것으로 인식했는데, 그 까닭은 민족의 생명은 자주로서, 민족의 자주권이 그 민족이 살고 있는 전국적 범위에서 확립되어야 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수호하는 일이 바로 통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한이 제시해 왔던 각종 통일 이론, 예컨대 “민주기지론,” “남조선혁명론” 그리고 “조국통일에 관한 이론”은 한결같이 민족통일을 지상명제로 간주한 결과인 것이다. 민족통일은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남북대화에서부터 남한의 자생적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전면적 무력남침까지를 포함하는 북한 민족주의의 최대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23)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다. 支配構造의 傳統的 權威主義

북한은 형식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이 설명하는 북한의 권력관계는 한국 전통사회의 지배양식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民族 傳統的인 性格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이 유교를 근간으로 한 한국 전래사상에 상당한 맥을 잇고 있다는 것, 소위 “조선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 “수령론”과 “후계자론”을 중심으로 세습적 왕조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의거하여 가족을 메타포로 한 有機體的 支配關係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과도기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거쳐 궁극적인 목표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傳統的 權威主義體制에 더욱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주체사상이 “4개노선”에 의한 지도적 원칙으로부터 하나의 철학적 원리로 비약할 무렵인 1970년대 초,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는 사상”이라고 정의했다.¹²⁴⁾ 그는 주체사상의 요구는 “모든 것을

124)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9.17),”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성은 또한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입니다 …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외부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되는 것입니다”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주체사상의 이러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혁명리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¹²⁵⁾

주체사상의 哲學的 原理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인간본성의 자주성, 창조성, 및 의식성은 관념론적 인간관과 역사관, 그리고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중심의 세계관과 관념론적 인간관은 한국의 전통사상이라 볼 수 있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단군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¹²⁶⁾ 곧, 조선조 유교의 이기론, 원효의 一心論, 단군의 홍익사상 등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390~420.

125) 김일성, “오스트랄리아기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답 (1974.11.4),” 「김일성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 583~96.

126) 金淵珪, “金日成 主體思想에 관한 研究,” p. 144.

사회역사적 원리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특히 유교사상이 지향했던 관념론적 세계관과 인간관, 집단주의 원칙, 神人合一의 인간중심주의, 德에 의한 통치와 처세의 규범 및 윤리, 그리고 개인의 수양과 교육의 중시 등은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의 계승발전이 아니라 유교적 철학원리의 現代的 復活로 보이게 한다. 혹자는 주체사상이 “손쉽게 한국인 대중과의 친화성을 확보”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전통적 민족 정서에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¹²⁷⁾

또한 북한은 자신의 사회주의혁명이 일제시대 한민족의 계급투쟁 및 抗日運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체사상이 처음 등장할 무렵부터 북한에서는 1920~193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등에 관한 대대적인 연구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김일성은 이에 관련하여 “우리가 과거 진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조선혁명을 옹기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¹²⁸⁾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면서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해방 이후 맑스·레닌주의 정권의 수립에서가 아니라, 1930년 6월 김일성이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맑스-레닌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혁명의

127) 위의 논문, p. 148.

128) 통일원, 「제4차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서울: 통일원, 1988).

새로운 길을 개척”한 靑靑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찾기도 했다.

주체사상에서 권력관계의 傳統的 權威主義가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대목은 수령론과 후계자론이다. 1960년대 후반 김일성에 대한 수령 칭호가 급격히 증가한 끝에 1969년에는 수령이 혁명과 건설의 향도인 당·정권기관·근로단체들을 지도하는 최고 뇌수라는 혁명적 수령관이 정리되었다.¹²⁹⁾ “혁명적수령관”은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를 ...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실 일념”을 전제로 하여,¹³⁰⁾ 수령이 역사발전과 혁명투쟁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무조건적이고 항구적이며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음으로써, 인민대중에게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¹³¹⁾ 곧, “혁명적수령관”의 근본 입장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수령의 사상을 절대적지침으로 하여 ...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의

129)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이념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 104~05.

130)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pp. 324~26.

131)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pp. 388, 602.

唯一領導體系를 지향했다.¹³²⁾

“혁명적 수령관”에 덧붙여 제기된 것은 “후계자론”이다. 수령의 후계문제가 주체사상을 통해 이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1974년부터 공식화된 김정일세습의 權力世襲 準備過程의 일환이었다. “후계자론”에 의하면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을 승계하는 것은 혈연적인 세습이 아니다. 그것은 “수령의 혁명위업이 장기성을 띠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역사적 위업”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단순한 부자관계에서가 아니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수령이 지니고 있는 모든 위대하고 비범한 사상, 정신적 품모와 특질을 체득”하고 있는 데서 찾아진다고 설명되었다.¹³³⁾ “후계자론”의 다음 순서는 당연히 수령에 대한 충성과 그 후계자에 대한 충성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후계자론”에 의하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혁명의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혁명적 의리로 간직하였고 할 수 있다.”¹³⁴⁾

父子間 權力世襲을 추진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합리화하는

132) 위의 책, p. 388.

133) 위의 책, p. 384.

134) 위의 책, pp. 381, 386.

일은 분명 사회주의의 본령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주체사상은 정통 맑스·레닌주의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수령론과 후계자론은 ‘왕권신수설’에 입각하여 왕권강화와 왕위세습을 정당화하는 이론체계로서, 사실상 한국 전통의 專制君主制를 북한에서 부활시켰다. 더욱이 북한의 왕권통치는 조선조의 왕도정치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김일성과는 달리 조선시대의 왕들은 신격화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위치를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면에서 양반관료제와 끊임없는 상호견제와 경쟁의 관계를 유지했다.¹³⁵⁾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은 각종 우상숭배를 통하여 군주의 완전성과 무오류성을 주장함으로써 조선조의 傳統的 統治樣式을 단순히 복원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강화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지속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장자에 대한 ‘왕권상속’을 단행했다. 결국 북한의 권력구조는 외래적인 것이 아니라 토착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수령론과 후계자론에 이어서 1980년대에 들어와 김정일이 제시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유교원리에 입각한 전통적 사회질서 형성을 더욱 더 뚜렷이 복원시키고 있다.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은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사회정치적생명이론

135) James B.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p. 1~16.

이 제기되었다.¹³⁶⁾ 그는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전자가 “생명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후자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했다. 사회정치적생명은 또한 “정치적으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생명”으로서 그 모태는 수령이고, 그 안에서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대중의 상호관계는 혼연일체로서 “유기적이며 전일적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이어서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 앞에서 한 담화에서 (소위 「7·15논문」)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북한의 새로운 統治模型으로 구체화시켰다.¹³⁷⁾ 이 담화는 주체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대중을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된 운명공동체로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곧,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대중으로 구성되는 북한체제의 모든 성원은 ‘한지붕, 한가족, 한몸’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김정일의 담화는 儒教的 家族

136)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8~81.

137)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144~69.

國家觀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는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기 부모가 다른 부모들 보다 낫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덕을 입을수 있기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낳아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라고 전체하고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변함없이 오직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해 나”가지고 주장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이와 같이 가족관계에 비유하여 수령의 역할을 아버지로, 그리고 당을 가정의 어머니로 상정한다. 그리고 인민대중은 ‘아버지 수령’과 ‘어머니 당’의 영도하에서 혁명투쟁을 담당·수행하는 자식과 같은 존재로서 인식된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자동적으로 ‘새끼 김일성들’(little Kim Il Sungs)이 되는 셈이다.¹³⁸⁾ 이렇듯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하여 북한사회 전체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家族主義的 統治原理는 유교적 전통과 크게 공명하고 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사실상 혈연공동체에서 효를 중심에 마련해두고 개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유교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¹³⁹⁾ 북한의 국가는 가족의 확대개념으로서 그 지도자는 오로지 총

138)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I*, p. 303.

139) 스즈끼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생명체론,”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서울: 동화연구소, 1991), p. 244.

성의 대상이 될 뿐이다. 결국 북한은 통치구조에 있어서 사회주의 원리 대신 한국의 傳統思想과 지배양식을 대거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3. 社會主義建設期 北韓 民族主義의 理想과 現實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공식적으로 민족주의를 부정, 비판하면서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사실상 나름대로 民族主義的 路線을 걸어왔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민족적 자주성의 개념에 따라 그 부수적인 정책 노선을 제시해왔으며, 이론적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계승·발전하기 보다는 한국의 전통사상과 전통문화에 더욱 더 의존하여 왔다. 또한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언술을 통해 노동자·농민계급중심의 민족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공존시킴으로써 민족국가를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 단위로 책정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기에 있어서 주체사상을 통하여 민족주의를 사회주의에 內面化시키는데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북한 민족주의의 특징은 첫째, 대외적으로 강력한 抵抗的 民族主義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김일성 자신은 “우리는 국제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고립주의와 민족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고 말했지만,¹⁴⁰⁾ 북한은 대외적 주체와

자주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것보다 선행시킴으로써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는 조선조 이래 쇄국이념의 연장일 수도 있고, 식민지 시대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유산일 수도 있으며, 한국전쟁 이후 더욱 강화된 서방국가들의 봉쇄정책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권내 국가 혹은 비동맹 제 3세계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自主的 互惠性 問題에 유난히 집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추구한 자주성의 원칙이 어떤 실질적인 이해의 증진보다는 단지 자주성 그 자체의 실현에 만족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 내지 무조건적 배타주의에 근접해 왔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도 제3세계 사회발전 과정에 흔히 보여지는 것처럼 민족주의를 산업화의 동력으로 활용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해 생산활동의 정신적 인센티브를 강도 높게 동원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은 자주성 원칙의 견지라는 명제하에서 國際的 孤立을 자초하고 민족주의의 개방적 측면을 외면함으로써,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동력의 일부를 외부사회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민족주의적 동기부여를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효율적으로 연결

140)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하는대는 실패했다. 북한이 1970년대 초나 1980년대 초처럼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개방의 필요성을 가끔씩 인식하면서도, 대외개방은 곧 대외의존이라는 식의 피해의식은 경제적인 침체와 정체를 가중시켰던 것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남한이 대외개방 정책의 선택적, 단계적 확대에 의거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과 크게 대조적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저항적 민족주의는 정치적 논리에 의거하여 경제적 실익을 희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주체사상은 대내적으로 강력한 權威主義의 民族主義를 지향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유교를 비롯한 한국의 전근대적 봉건사상을 민족주의적 정서로서 내면화하면서, 실상에 있어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합리화하고 김정일에 대한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도구로 전략했다.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권내에서도 유례가 없이 강도 높은 個人 偶像化를 시도했고, 그 바탕 위에서 부자간 권력세습마저 감행했다. 그리고 수십년에 걸친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북한 정치사의 이면에는 피의 숙청과 인권유린이 즐비했다. 주체사상은 따라서 전통적 권위주의의 부활을 통한 한국 민족주의의 재현이라기 보다는,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를 위해 한국 전통사상과 문화 가운데 부정적인 것만을 재활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수령론이나 후계자론,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어느 곳

에서도 민주주의적 권리나 개인의 자유는 무의미한 것이다. 비록 북한 헌법에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 를 보장”하며, 또한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하는 집단주의적 원칙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의 이러한 集團主義 原則을 민족주의와 혼동하는 것은 착각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지향하는 집단주의는 집단적으로 민족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에는 개인주의적인 속성보다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민주적 차원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역사적 진화를 거듭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도 리더쉽의 脫人格化 段階를 거쳤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왕권신수설에 입각하여 “짐이 곧 국가”라고 했지만, 프랑스혁명 이후 나폴레옹 시대에 들어와 프랑스 민족주의는 전제주의하에서도 권력의 법제화와 제도화가 결실을 맺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수령론”과 “후계자론”은 리더쉽의 제도화와는 무관한 것이며, 모든 것을 김일성의 전횡에 맡기는 주체사상에 의해 북한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사실상 민족주의적이라기 보다는 개인숭배적이고 인물중심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비록 북한의 주체사상이 1980년 제6차 조선로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주체사상이 지향하는 북한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社會主義的 要素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사회·경제발전이 사회주의적 발전전략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곧, 북한의 발전전략은 계획경제와 중앙집권적 통제라는 스탈린식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공업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자력갱생의 원칙하에서 생산력 제고를 위한 정신적 인센티브의 극대화를 모색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의 용기안에 사회주의 생산양식 및 발전노선을 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 민족주의의 사회주의적인 성격은 또한 주체사상의 階級主義 路線에서도 잘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체사상은 민족을 기본 단위로 하면서도 계급을 기본 요소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지향하는 계급적 노선은 노동자·농민 중심적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주체사상은 민족적 이익의 구현을 계급투쟁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역사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물론 한국사회에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해방적 개혁사상과 평등지향이 주체사상에 접목되어 있다고 볼으로써,¹⁴¹⁾

주체사상이 추구하는 階級中心主義의 사상적 기원을 맑스·레닌주의가 아닌 한국 역사속에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주체사상이 태동하고 발전되는 역사적인 경과를 보면 그것의 계급주의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혁명을 기도한 맑스·레닌주의를 제한적이거나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끝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북한 주체사상의 自主性 原則이 과연 실제로 얼마나 관철되었는가를 따지는 일이다. 왜냐하면 자주성을 지향한다는 것과 자주성을 실천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치·외교방면에 있어서 북한은 자주의 원칙을 비교적 견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 북한은 주요 서방세계에 대한 관계 자체의 동결로 인해 자주 혹은 종속이 문제가 될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북한이 의미하는 정치·외교적 자주의 핵심은 따라서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주체사상은 그 기원 자체가 소련의 영향력으로 벗어나고자 노력의 부산물이었으며, 이 점에서 한국전쟁 및 전후 복구 과정에서 보여진 중국의 지원은 소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1960년대 초 이후 북한은 적어도 정치·외교면에서는 거의 완전한 대소 자주성을 확보한 것으

141) 진덕규, 「북한 통치이념에 있어서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 pp. 42~46.

로 볼 수 있다.¹⁴²⁾

중국의 경우 소련과는 달리 정권수립 때부터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별로 하지 않았다.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을 도운 것이 오히려 북한이었고, 이에 대한 ‘報恩’의 성격으로서 중국이 한국전쟁시 북한을 위기로부터 구출한 이래 양국은 互惠的 協力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中·蘇 理念紛爭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자주적 입장을 취하는데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으며, 중국이 북한의 자주성을 침해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거의 찾기 어렵다. 중국은 소련의 미온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이미 1980년대 초에 김정일 후계체계를 인정할 정도였다. 또한 최근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를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도 중국이었다.

그러나 經濟와 軍事的 側面에 있어서 북한의 자주성은 그 정도가 다소 떨어졌다. 북한 정권수립 이후 최근까지 소련과 중국은 각각 북한의 첫번째 및 두번째 원조공여국 및 교역 상대국이었다. 그리고 군사 방면에 있어서 북한의 전시 동원 체제의 정비 및 재래식 무기의 개발 등을 제외한 첨단군사 장비의 보급이나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소련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한의 대외무역

142) 金淵珏, “金日成 主體思想에 관한 研究,” p. 200.

의존도는 남한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편이고, 북한의 군사적 자위 수준 역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중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군사적으로 핵개발의 국제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북한의 經濟的, 軍事的 自主性이 정치·외교적 측면에 있어서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第 V 章 北韓 社會主義의 退潮와 民族主義의 前面化

1. 北韓 社會主義의 試鍊과 '조선민족제일주의' 및 '우리 식 사회주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시련에 직면했다.¹⁴³⁾ 첫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내부적 한계와 잇따른 경제적 失政에 따라 북한경제는 1970년대 이후부터 누적된 저성장과 침체의 연장선에서 危機局面으로 접어들었다. 제2차 7개년경제계획 기간 (1978~1984) 동안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불과 2~3%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¹⁴⁴⁾ 그 이후 1980년대 후반의 연평균 성장률은 더욱 더 떨어져 약 1.3%로 추정되고 있다.¹⁴⁵⁾ 둘째,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의 변화와 거기서 연유한 사회주의권의 세계적 종말 분위기는 북한의 國際的 孤立을 심화시켰다. 이

143) 전상인, “잃어버린 혁명, 흔들리는 이념: 한반도 사회주의 운동 백년의 회고와 평가” (한국지역연구협의회 '93년도 통일 교육연구 발표논문, 1993.4.11), p. 35.

144) 지그프리드 샤페(Sigfried Scheibe), “기로에 선 북한경제·사회”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발표논문, 1991.6.28).

145) 民族統一研究院,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 219.

와 덧붙여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적 완성을 목전에 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대북한 압력도 가중되었으며, 남한내 일각에서 吸收統一論 혹은 흡수통일 불가피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의 지도부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노선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인민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1984년 2월 16일, “인민들에게 빈 밥그릇을 놓고 사회주의가 좋다고 교양하여서는 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깊이 인식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물질적 만족의 중요성을 시인했다.¹⁴⁶⁾ 그리하여 같은 해 8월에 소위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 착수하여 경공업 소비재 생산을 늘이도록 한 일이나¹⁴⁷⁾ 9월 8일 최고인민회의가 “조선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제정하여 대외 개방정책을 입안한 것은 북한의 經濟的 危機狀況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외정세에 대한 북한 지도부 자체의 평가도 심각했다. 북

146)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2.16),”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187~204.

147) “김정일동지께서 경공업제품 전시장을 돌아보시었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5), pp. 136~37.

한은 1980년대 전반기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강화되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버리고 자본주의적방법에 의거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심해진 복잡한 정세”로 인식했고,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대하여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힘의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이른바 <평화적이행>전략을 들고나와 사회주의 나라들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한 시기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위업은 심각한 좌절과 시련을 겪게”되었다고 토로하였다.¹⁴⁸⁾ 특히 김정일은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치열한 상호각축을 예상한 레닌의 『제국주의론』과는 달리, 이제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됨에 따라 자본주의열강들은 경제기술적으로 의존하고 결탁하게”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우려하였다.¹⁴⁹⁾

이와 같이 가중된 의우내환속에서 북한은 국가의 존속과 김정일 세습체계의 공고화에 최대의 역점을 두면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부분적인 改革과 開放化 作業을 병행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주체사상의 틀안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148)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p. 552, 583~84.

149)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당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9.25),”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72.

“우리 식 사회주의”이론을 개발하여 체제의 수호 및 회생을 시도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논리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매우防禦的인 측면에서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⁵⁰⁾ 다시 말해 1989년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1991년 蘇聯邦의 해체는 북한 사회주의를 새롭게 채색할 필요성을 제고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북한의 민족주의는 그 이전의 내면화 상태에서부터 전면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1985년은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反轉을 기록한 해였다. 그해에 출간된 『철학사전』에서까지도 북한은 민족주의를 “전인민적리익을 내세우면서 자기민족내의 부르조아지의 리해관계를 합리화하는 사상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투쟁할수 없게 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합리화하는데 복무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여 민족과 민족주의를 해설하는 새로운 논문들이 대거 출판되었다. 특이할만한 일은 이때부터 민족에 대한 개념이 수정되고 민족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먼저 이들은 “민족의 징표”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계급론

150) 金聖哲,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 70.

적 입장을 완화하는 대신, 혈연과 언어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예컨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으로 결합하는 공통성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라고 보았다.¹⁵¹⁾ 또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 및 국가적범위에서 개척되어나간다”는 입장에서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못박았다.¹⁵²⁾

이와 같이 민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다음 북한은 민족적 自負心과 優越感을 과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우리 민족제일주의” 혹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했다.¹⁵³⁾ 그는 “내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것은 자기민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

151)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2), p. 6; 리규린,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10), p. 14; 최길산, “우리당이 밝힌 민족문제에 관한 리론,” 「남조선문제」 (1986.2). 참조.

152)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153)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자기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들에게 충실할수 없으며 자기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수 없습니다 ... 우리는 언제나 자기나라의 구체적현실에서 출발하여야합니다 ... 우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그러나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내세우라는것이 아닙니다”하고 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배타적 성격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수는 없”다고 말하여 민족주의라는 용어의 직접적인 사용은 여전히 기피했다. 그는 애국주의라는 말을 선호했는 바,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국제주의자”라고 말했던 것이다. 결국 김정일에 의하면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東歐 社會主義가 붕괴되던 1989년 말에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당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재차 확인했다.¹⁵⁴⁾ 그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우

월한 사회주의제도에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정의하고 북한을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라고 자찬했다. 김정일은 세계에서 북한이 “사회주의를 으뜸가게 세워놓았다는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 아닐수 없다”고 자부하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자기 식으로 건설한것으로 하여 ... 그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을 가집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오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후 이 나라들의 경제가 더욱 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는것은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적경제건설로선을 견지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도입한 후과”라고 평가했다.¹⁵⁵⁾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그러나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 支配體制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원천력에서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가장 위대한 수령과 지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기 때문이다.¹⁵⁶⁾ 다시 말해 “우리 민족

154)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12.28),”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248~73.

155) 김재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우월성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정당한 로선,” 「경제연구」 (1992.3), pp. 5~7.

156)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p.

이 자기 민족을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자랑할수 있는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¹⁵⁷⁾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한 한 방송해설은 “민족의 위대성이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모시고 있는 수령의 위대성과 당의 영도의 현명성, 민족이 지닌 지도사상의 위대성과 사회제도의 우월성에 의해 규정되며 여기서도 수령의 위대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⁸⁾ 그 까닭은 “수령은 민족사회 집단의 최고 뇌수이며 단결과 영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이미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논할 때 등장한 것이나, 김정일이 사회주의체제의 大變革을 목격한 다음인 1991년 5월 5일에 발표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이후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¹⁵⁹⁾ 이 논문에서 그는 계급을 초월하고 세계변화와는 무관하게, 民族이 사회주의체제의 가장

38.

157) 김영진,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결정적담보,” 「철학연구」 (1992.1), pp. 19~23.

158) 「평양방송」, 1994.2.1.

159)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343.

으뜸가는 단위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일은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라고 말하고,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사회적집단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되여 나갑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갈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인류력사상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형성과 발양을 위한 사회적 기초로, 그 요인”으로 되는 것이다.¹⁶⁰⁾

몇달 뒤 김일성은 김정일의 주장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김일성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 단위”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개별적계급계층의 사상과 리념을 옹호하고 리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것은 민족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⁶¹⁾ 보다 획기적인 부분은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이며 어떤

160) 장석소, “조선민족제일주의형성의 중요 요인,” 「철학연구」 (1993.2), pp. 12~16.

161)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대표 성원들과 한 담화, 1991.8.1), 「로동신문」, 1991.8.5.

계급과 계층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리익을 실현할수 없”다는 논리하에서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리익도 보장될수 있”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이로서 民族은 단순히 혁명과 발전의 기본 단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선행하는 이해관계의 主體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더욱이 김일성은 같은 맥락에서 “부르조아민족주의”와 “진정한 민족주의”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으나,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조아지가 반동적지배 계급으로 되면서 …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이런 의미에서 “부르조아민족주의는 … 참다운 민족주의와 대치되는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성은 “놀고 먹는 자들이” 아닌 한, “정신로동을 하든 육체로동을 하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참다운 민족주의자가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민족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라고 말하고, “참다운 애국자”는 또한 “세계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국제주의자”라고 덧붙였다. 김일성은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계급성과 국제주의를 초월한 民族主義가 전면에 부

상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북한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대외정세적 위기를 극복하는 理論的 支柱가 되었다. 1991년 5월,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가 선언된 것에 이어서, 1992년 4월에 있었던 헌법개정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계승하고 있다는 구절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조했다. 김일성은 또한 “사회주의는 곧 우리인민의 생활이며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맑스·레닌의 것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것도 아닌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결국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일치시키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재확인했던 것이다.

2. 最近 北韓의 民族的 動機 強化政策

가. 民族大團結에 의한 統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 논리에 의한 북한의 민족적 동기 강조는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에 의한 統一原則을 제시하는데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문제에 관련하여 민족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72년 남북한 7·4공동

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의 하나로 “자주” 및 “평화”와 함께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며, 7·4공동성명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난 다음 1973년 6월 23일에 김일성은 “고려연방제”를 제의하면서 남북 각계각층 인민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을 제안하기도 했다. 南北對話가 중단된 이후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무조건적 당국대화”를 제의했을 때도 북한은 다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로 예의 “전민족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1980년에 개최된 제6차 조선로동당대회에서 북한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의 3대 원칙으로서 自主, 平和, 그리고 民族大團結을 재확인하였다.

물론 “대민족회의” 개최에 관한 북한의 제의는 남한에 의해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민족대단결”도 통일 3대원칙의 하나에 불과하여 민족적 동기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였다. 그러나 1991년 김일성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을 상대로 한 담화에서부터 “민족대단결”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김일성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전제하고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본질적내용”을 이룬다고 설명하면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

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것"이라고 부언했다.¹⁶²⁾ 이로써 民族大團結은 자주와 평화에 선행하는 통일원칙이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3년 4월 7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5차회의는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채택하였다.¹⁶³⁾ 정무원 총리 姜成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 대단결강령을 채택할데 대하여”라는 의제와 함께 남한정부에 대한 “4개 요구사항”을 덧붙였다. 그 이후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대남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는 역대 “대민족회의”에서 보다 훨씬 강도 높은 민족주의적 修辭가 담겨져 있다. 그리하여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 식 사회주의” 논리의 연장선에서 현단계 북한의 情勢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그 전문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인건,

162)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1991.8.5.

163) 「로동신문」, 1993.4.8.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튼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자고 호소했다. 결국 全民族大團結의 의의는 민족 전체가 지역과 계급, 정견과 신앙을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의 통일과 통일조국의 번영을 위해 ‘무조건 뭉치자’는데서 찾아지고 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1항은 민족대단결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¹⁶⁴⁾ 전민족대단결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는 연방제이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2항은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에 관한 것이다.¹⁶⁵⁾ 그것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

164) 김창운, “민족단합의 대헌장 (1), 자주적인 통일국가창립은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 『로동신문』, 1993.4.24.

165) 리대영, “민족단합의 대헌장 (2), 전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 『로동신문』, 1993.4.26.

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고자 하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은 사실상 민족주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民族大團結의 원칙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3항의 내용이다.¹⁶⁶⁾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것이며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할 뿐 아니라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는 민족대단결의 方途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4항은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할 것을,¹⁶⁷⁾ 제5항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할 것을,¹⁶⁸⁾ 제6항은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함을,¹⁶⁹⁾

166) 조해성, “민족단합의 대헌장 (3),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로동신문」, 1993.4.28.

167) 리현도, “민족단합의 대헌장 (4), 동족끼리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로동신문」, 1993.4.30 참조.

168) 엄일규, “민족단합의 대헌장 (5), 민족의 화합과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 「로동신문」, 1993.5.2 참조.

제7장은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성을,¹⁷⁰⁾ 제8항은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할 것을,¹⁷¹⁾ 그리고 제9항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할 것을,¹⁷²⁾ 끝으로 제10항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할 것을¹⁷³⁾ 각각 주장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발표 이후 북한은 민족주의적 정서의 제고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政治思想的 統制를 도모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민족적 동기를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나온 직후인 1993년 4월 10일에 평양시 군중지지대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각 시·도별 군중지지대회를 열었으며, 당·

169) 리형진, “민족단합의 대현장 (6), 전민족을 애국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기치,” 「로동신문」, 1993.5.4 참조.

170) 류 광, “민족단합의 대현장 (7),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민족단합의 기치,” 「로동신문」, 1993.5.6 참조.

171) 송철영, “민족단합의 대현장 (8),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강령적지침,” 「로동신문」, 1993.5.8 참조.

172) 호영길, “민족단합의 대현장 (9), 민족단합을 위한 획기적인 방도,” 「로동신문」, 1993.5.10 참조.

173) 김창운, “민족단합의 대현장 (10), 전민족을 폭넓은 단합의 길로 떠미는 추동력,” 「로동신문」, 1993.5.12 참조.

정 고위인물과 각종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이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켰다. 또한 4월 12일에는 이 강령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문서로 배포하였고, 4월 24일에는 楊亨燮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로 남한의 정부 당국자, 정당대표자, 재야단체 등에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실천을 위한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송한 바 있다.

나. 民族文化 遺産의 復元과 發展

조국통일과 관련하여 민족대단결 원칙을 전례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북한은 민족문화 유산의 계승·발전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 사회주의혁명의 土着化를 위해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는 했다. 그러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추진과 다른 사회주의국가와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연대성을 위해 구시대와의 단절은 사실상 불가피했고 따라서 민족문화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처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민족전통과 민족문화가 다소 강조되기는 했으나, 김일성 유일지배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개인우상화가 고조되면서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시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¹⁷⁴⁾

174) 이종석, “단군왕릉 발굴과 북한의 민족주의,” 『통일한국』 (1994.4), pp. 68~71.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제기하고 민족대단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족문화의 復元事業에 열중하고 있다. 보기로 1992년 5월, 김일성은 황해도 개풍군에 있는 고려태조 왕건의 무덤을 방문하고 “왕건이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를 세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왕릉의 증축공사를 지시했다. 김정일 역시 이 왕건왕릉의 改建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사는 1994년 1월 31일, 왕건의 생일 1117돌을 기념하여 완성되었다.¹⁷⁵⁾ 왕건왕릉의 개건식에서 개성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립수만은 “고려태조 왕건왕릉이 개건된것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 우리 민족이 국가시대, 문명시대에 들어선 이후 동방의 강성대국 고구려와 발해를 이어 첫 통일국가인 고려에 이르는 민족사의 전통을 후손만대에 물려줄수 있는 또하나의 귀중한 역사적 문화재보를 마련한것”이라고 말했다.

립수만의 개건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 가운데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고려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왕건왕릉 改建에 앞서 북한은 1993년 5월에 고구려 시조 동명왕릉의 증축공사도 완료하였으며,¹⁷⁶⁾ 특히 고구려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로서, “근 1,000년을 헤아리는 자기의 역사에

175) 「로동신문」, 1994.2.1.

176) 「로동신문」, 1993.5.30.

서 수십차례의 외세의 침공을 당했으나 그때마다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싸움으로써 민족적자주권을 영예롭게 고수”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¹⁷⁷⁾ 또한 1992년 5월에는 발해유적 발굴조사사업을 연해주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바도 있다.

북한이 전통문화의 유산을 복원·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고조선의 단군왕릉 발견과 檀君實在說의 주장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유구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단군신화를 말해왔지만 단군을 어디까지나 신화속의 인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단군조선과 단군은 봉건사가나 민족주의사가에 의해 實在한 고대국가, 實在한 인물처럼 왜곡·과장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¹⁷⁸⁾ 그런데 북한은 1993년 9월 28일 “단군의 유골과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발표하고 이어 開天節을 하루 앞둔 10월 2일, 사회과학원은 “단군릉 발굴보고”를 발표했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단군 유골 및 유물의 발견은 평양이 “조선민족의 발상지이며 우리 민족의 국가형성과 발전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깊이 간직하고 사상교양

177) 최창빈, “고구려는 대외관계에서 시종일관 자주권을 고수한 나라,” 「력사과학」 (1993.1), pp. 40~46.

178)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 472~73.

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¹⁷⁹⁾ 또한 1993년 10월 12~13일, 평양인민대학습당에서는 단군릉 발굴결과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북한 사회과학원의 단군릉 발굴 보고문에 따르면,¹⁸⁰⁾ “종전의 신화적, 전설적 인물로 간주되어온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지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었다는것이 명백해졌다”고 한다.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의 서북방 대박산 동남쪽 경사면에서 발견된 단군릉에는 단군과 단군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86개의 뼈가 출토되었으며, 남자뼈에 대한 연대측정의 결과 지금부터 5천 11년전의 것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단군은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 곧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실로 우리 민족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을 이룩한 것으로 美化되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단군유골의 출토를 계기로 하여 “단군의 후예로서의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은 더욱더 높아”짐에 따

179) “당과 수령의 명도를 받들고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어 나가자,” 「로동신문」, 1993.10.4 사설.

180)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북한의 ‘단군릉’ 발굴관련자료 - 사회과학원 ‘보고문’ 및 학술논문」 (서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라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 같은 민족이라는 물보다 진한 피의 동질성을 우선시 하면서 … 분단의 비극을 조선민족의 뉘, 민족의 폭넓은 도량으로 끝장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자고 선동했다.

단군릉 발굴을 즈음하여 열린 북한 사회과학원의 학술대회 역시 檀君實在說을 통해 고조선의 도읍지가 평양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단군의 후예로서의 單一民族이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예컨대 사회과학원의 박진욱은 단군의 유골이 발견된 의의는 “단군이 죽은 것과 따라서 그가 도읍한 것이 평양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데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혁명의 수도 평양의 유서깊은 력사”를 자랑했다.¹⁸¹⁾ 김일성대학의 현명오 역시 “과거 사회에서 왕들의 무덤을 수도 부근에 쓰는것이 대체로 하나의 관례”라고 지적하면서 “강동의 단군릉이 절대적인 단군의 무덤이라고 확정”했다.¹⁸²⁾ 그리고 사회과학원의 전영률은 “단군 및 수도 문제에서 얻은 성과”를 통해 “단군은 조선민족의 원시조이고 오늘의 조선민족은 그의 후예라는 인식”하에서 7천만 동포가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¹⁸³⁾

181) 박진욱, “단군릉 발굴 정형에 대하여,” 위의 책, pp. 26~33.

182) 현명오, “첫 문명국가인 고조선의 수도 단군의 도읍지는 바로 평양이었다,” 위의 책, pp. 68~72.

한편, 북한은 1993년 12월 9~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 6차회의를 열고 “민족문화 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결의를 채택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은 보고를 통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벌어지고 있는 우리시대의 역사적조건에서 민족문제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동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민족에 대한 립장은 민족유산에 대한 립장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며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적자부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징”이라고 주장했다.¹⁸⁴⁾ 그는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라고 덧붙였다.

김기남은 이어서 “남조선위정자들”이 “신라정통설을 유포시키면서 민족문화의 이질성을 억지로 날조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과 남 사이의 판이한 대결을 이루고 있는 현 실태는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태도가 곧 애국자와 매국

183) 전영률, “김일성의 단군 및 고조선과 관련한 교시는 역사연구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은 강력한 지침,” 위의 책, pp. 17~25.

184) 許文寧,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부록 2, pp. 32~56.

자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조선중심의 고대사와 고구려중심의 중세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북한 지역에 民族史 正統性의 중심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특히 단군릉 발굴을 통해 “조선사람의 기원문제, 우리 민족의 시원문제가 빛나는 해명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산수수려한 평양은 인류의 발상지로, 민족문화의 중심지로 조선민족의 성지로 온세상에 이름떨치게 되”었다고 자랑했다.

그는 “민족문화 유산은 반드시 그것이 창조되어온 민족의 발전력사와 연관시켜 보면서 그속에 있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정확히 가려내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옳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하는 “사회주의민족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문화건설에서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적 패란을 다같이 배격하고 주체성의 원칙과 노동계급성의 원칙, 역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자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민족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는 분야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民族文化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학술상의 문제이거나 …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주시대의 기본 요구와 민족자주노선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비약시키고 있는 것이다.

3. 民族的 動機 強化의 意味와 評價

최근 북한이 전면화하고 있는 민족주의 혹은 민족적 동기의 강화 배경 및 의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 그것은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體制的 危機를 반영하는 것이다. 가중되는 경제적 침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른 국제적 고립의 심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방어적 입장에서 주체사상의 새로운 이론적 변신을 모색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은 현존사회주의체제의 범세계적 붕괴현상에 대응하고, “전민족대단결” 원칙을 통해 남한에 의한 소위 ‘흡수통일론’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우외환속에서 김정일 세습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도 북한은 민족문화의 전통을 강조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이 작금에 민족적 동기를 강조하는데는 보다 시급히 당면한 현안들에 대처하자는 戰術的 目的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의혹을 호도하고 그것을 민족내부의 문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失政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전통문화 계승에 따른 민족적 긍지로 무마할 필요성도 느꼈을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개혁과 개방에 대비하여

남한 및 해외교포 자본을 도입할 목적으로 민족대단결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대외개방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외부사조의 침투를 민족주의적 정서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자는 고려도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전면화가 보다 점증적이고도 적극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필요도 있다. 우선 민족적 동기의 강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10년에 가까울 정도로 나름대로의 장기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 하다. 따라서 그것을 현 국면의 타개를 위한 전략적이고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점에서 1993년 4월에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1950년대 전쟁전략의 실패 이후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남한에 대한 패권적 혁명전략을 수정하는 대신, 남한과의 現狀維持的 競爭戰略으로 선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¹⁸⁵⁾

나아가 북한은 차제에 기존 (혹은 현존) 사회주의와의 이론적 결별을 통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향함으로써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치이념을 적극적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주체사상을 전개하면서 그것의 탈맑스·레닌주의화를 꾸준히 진행시켜 왔던 바,

185) 金台鎰·全相仁,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민족주의를 통해 사회주의와 가장 친화력이 강한 이념적 모색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⁶⁾ 아니면 주체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기존의 민족주의 노선을 표면화,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계급축으로부터 민족중심으로 전이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¹⁸⁷⁾

북한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民族主義的 社會主義를 강화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 후계체계의 공고화를 위하여 카리스마의 제도화가 전통적 지배의 정당성 구축을 중심으로 실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카리스마는 혁명적이고 一回的이며 불안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카리스마의 승계는 불가피하게 제도화 혹은 일상화의 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의 경우 傳統的 支配樣式으로의 복귀는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용이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비록 방법과 폭 및 시기의 문제를 미정으로 남기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회생을 위해 일정한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북한의 지도부도 1980년대 이후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개혁과 개방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폐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정하는 것

186) 진덕규, 「북한 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

187) 金淵珪, “金日成 主體思想에 관한 研究.”

이다. 따라서 북한은 기존의 경제운용 원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형식논리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민족주의는 북한 지도부의 자기변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준거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산업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처럼 경제발전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민족주의를 북한이 재차 활성화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경우 북한의 민족주의가 開放型 民族主義로 연결될 소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끝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북한이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와의 관계에 관련하여 오스트리아-맑스주의자들의 입장을 연상시킨다. 대표적으로 오토 바우어와 칼 레너는 상부구조로서의 ‘문화’가 차지하는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사회주의는 원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일 뿐, 민족문화를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오스트리아-맑스주의자들이 오스트로-헝가리제국의 유지를 위해 민족자결권을 유보하는 대신 民族文化的自治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우와 상이하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이론적 틀 안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복원시키는 점에 관한 한, 북한의 민족주의 정책은 오스트리아-맑스주의와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다.

第 VI 章 結 論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민족국가를 단위로 성립되었으며, 해방에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민족주의를 배척하면서도, 실지로는 그것을 사회주의혁명의 政治理念的 手段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일찍부터 민족주의적 이념을 사회주의 원리안에 토착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북한 민족주의의 특색은 반제·반봉건주의를 강력히 표방하였고, 노동자·농민중심의 강한 계급주의적 성향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반자유주의적 권위주의체제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민족국가 단위의 대외적 자주성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인식했으며,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남한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상적 에너지도 민족주의로부터 구했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주의에는 대의민주적 차원이 설정되지 않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이론에 의한 민족주의의 민중적 차원마저 형식적인 것에 머물렀다. 북한은 또한 대외적 자주성이 抵抗的 民族主義에 기초함으로써 민족주의의 대외개방적인 측면을 억압하였다. 또한 건국과정 및 한국전쟁에 관련하여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후견과 지원을 받는 자기모순을 드러냈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민족주의와 프

볼레타리아국제주의 사이에서 기회주의적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북한은 1950년,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기도에서 외세의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반쪽인 남한을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무력침공을 불사하는 등 민족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로의 본격적인 이행과 발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형성, 1950~1960년대 사회주의권의 내부적 동요와 중·소분쟁 등과 관련하여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고안하고 이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착시켰다. 주체사상은 民族主義를 사회주의속에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간의 이론적 긴장을 해소하고자 했다.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주의의 부침과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확립 및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와 관련하여 理論的 變容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체사상은 민족주의 대신 ‘사회주의적애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 민족주의의 階級主義的 世界觀을 반영했고, 사상에서의 주체를 필두로 하여 정치·외교적 자주, 경제적 자립 및 국방에서의 자위를 추구하는 한편,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전통적 왕도정치를 계승·강화하였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주체사상에 용해된 북한의 민족주의는 우선 대내적 측면에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정치 사회적 결속을 도모하고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이념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주체 사상은 서방세계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및 중국과 소련에 대한 정치·외교적 자주노선의 실천 등을 통해 민족자결원칙을 나름대로 고수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북한의 민족주의는 대내적 통합의 원천, 산업화의 견인차, 그리고 대외적 주체 및 자주노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아울러 남한에 대한 강력한 통일의지를 유지·강화하는데도 북한의 민족주의는 주체 사상의 틀 안에서 기능했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은 擬人화된 권위주의체제를 지향하면서 전통적 왕권정치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김일성 일인 독재정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또한 저항적 민족주의는 대외관계의 배타주의와 연결되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한편, 경제발전의 민족주의적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북한이 ‘주체경제’ 논리를 고수한 것은, 1970년대 및 1980대 초의 부분적 경제개방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불 때 북한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몰고간 유력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또한 1980년대 초부터 맑스·레닌주의와의 결별을 추진했으나 계급사관에 입각한 사회주의 원칙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이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階級 偏向的 民族主義는 줄곧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북한은 소위 ‘4개노선’에 입각하여 주체와 자주, 자립 및 자

위를 추진하였으나 경제와 군사방면에서는 중국과 소련에 대한 대외의존이 적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사회주의는 경제적 위기의 심화 및 사회주의권의 세계적 몰락 등을 배경으로 하여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다. 1985년부터 북한의 주체사상은 ‘조선 민족제일주의’ 혹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사회주의 이론 및 체제와의 결별을 가속화했다. 주체사상에서 사회주의가 퇴조하고 계급적 관점이 약화되는 대신, 북한은 민족주의 개념을 전면화하면서 민족적 동기를 크게 강화하는 理想的 變身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1990년대 이후 통일정책에 있어서 민족대단결론의 제시와 단군릉 발굴을 비롯한 민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민족적 동기 강화정책은 단기적으로 볼 때 대내외적으로 세분리한 현 국면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방어적인 성격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김정일 후계체계의 공고화 작업과도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의 전면화에는 소위 흡수통일의 예방에 따른 남북한 공존체제의 유지, 핵개발 의혹의 국제적 호도와 핵문제의 민족내부화, 경제적 失政의 문화민족주의적 무마, 경제적 개방에 대비한 남한 및 해외교포 자본의 유인과 같은 전술적 목표가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전례없이 민족주의 혹은 민족적 동기를 강화하는 것에는 보다 장기적이고도 전략적인 목표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현존사회주의체제가 세계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제시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내용과 본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야 했을 것이다. 이때, 민족주의가 세계적인 탈맑스·레닌주의화 추세하에서 사회주의의 이념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혹은 어쩌면 유일한 思想的 代案으로 모색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서두르면서, 북한 지도부는 기존의 자력갱생적 사회주의적 경제발전 원칙으로부터 후퇴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의 논리적 근거를 민족주의에서 찾았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기적으로 김일성 없는 주체사상이 임박했던 1990년대 초의 상황에서 주체사상의 본격적인 민족주의화는 국내정치적으로도 북한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결국 작금에 북한에서 보여지는 민족주의의 전면화는 단기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長期的이고도 戰略的인 이념적 전환의 시작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끝으로 북한 민족주의의 미래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주체사상의 골격내에서 민족주의가 사회주의를 우선하

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이념적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내용을 민족주의로 채우려는 이론적 노력으로써 민족개념의 再定立과 함께 민족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것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다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의 길임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가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 고양을 위한 민족사의 재해석 작업이 활발해질 것이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또한 경제적 개혁 및 개방과 관련하여 저항적 민족주의로부터 개방적 민족주의로 점차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실익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은 민족주의의 對外開放的 側面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이럴 경우 민족주의는 남한 및 해외 민족자본의 북한 유입이나 개혁과 개방에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통제 이완 현상의 사전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개혁 및 개방을 통한 북한 경제의 회복 내지 새로운 도약을 기도하는데 있어서 민족주의는 북한 주민들을 이념적으로 재동원하는 동기부여책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민족주의는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 지향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共存摸索的인 것으로 전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국제적인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

북한간의 국력 격차를 십분 감안한 바탕 위에서 민족주의를 무력통일을 위한 이념적 에너지로 보다는, 남북의 平和共存 및 聯邦制를 추진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민족대단결’ 원칙을 대남정책의 기본 골격으로 하여 민족과 민족주의를 공통분모로 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교류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범주 설정, 적대적인 남북 대립의 역사적 화해 및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둘러싸고 북한의 민족주의는 남북한간의 새로운 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민족주의는 민주적 혹은 민중적 차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이론을 통하여 반민주주의적인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성 사후에 있어서도 북한은 ‘수령론’에 입각한 유일영도체제와 같은 주체사상의 핵심적 사항의 수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나 ‘사회주의 대가정’의 개념의 강화를 통해 민족주의가 김정일의 權力基盤을 공고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3」.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金聖哲.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 金台鎰·全相仁.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 로날도 몽크 저. 이원태 옮김.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주의」. 서울: 민·글, 1993.
- 로스돌스키. “노동자와 조국: 「공산당 선언」에 대한 소고.”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서울: 한겨레, 1986.
- 民族統一研究院.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서울: 까치, 1989.

-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북한의 ‘단군릉’ 발굴관련자료: 사회과학원 ‘보고문’ 및 학술논문. 서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 브룬 엘렌·재퀴스 허쉬. 「사회주의 북한: 북한 경제발전 연구. 서울: 지평, 1988.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신용하 편. 「민족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 1985.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진덕규. 「북한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 서울: 통일원, 1991.
- 湯淺尙男 著. 조용범 옮김. 「민족문제의 사적구조: 계급과 민족의 변증법. 서울: 한울, 1985.
- 통일원. 「제4차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서울: 통일원, 1988.
- 許文寧.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 홉스봄 E. J.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
과 비평사, 1994.
- 황의각. 「북한경제론」. 서울: 나남, 1992.
- Bauer, Otto. *The Austrian Revolution*. trans. by Stenning, H. J.
New York: Burt Franklin, 1970.
- Carr, E. H.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Macmillan, 1945.
- Carter, Stephen K. *Russian Nationalism: Yesterday, Today,
Tomorrow*. London: Pinter Publishers, 1990.
-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 Davis, Horace B.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 Geller, Ernest.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4.
- Kim, Byoung-Lo Philo. *Two Koreas in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of Principles and Strategies of
Capitalist and Communist Third World Development*.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92.
- Kohn, Hans. *The Idea of Nationalism*. New York: Macmillan,

1961.

Koo, Bon-Hak.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Luxemburg, Rosa. *Selected Political Writings of Rosa Luxemburg*.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Mann, Michael.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 I: A History of Power from the Beginning to A.D. 17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alais, James B.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oulantzas, Nicos.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New Left Review, 1980.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Smith, Anthony D.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 *Theories of Nationalism*. London: Duckworth, 1971.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Wallerstein, Immanuel. *The Modern World-System I*. London: Academic Press, 1974.

2. 論 文

젤러 어네스트. “근대화와 민족주의.”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고병철. “한국전쟁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김귀옥.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당과 인민대중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金淵珏. “金日成 主體思想에 관한 研究: 그 民族主義的 性格에 대한 批判的 分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김영진.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결정적담보.” 「철학연구」 (1992.1).

김윤식. “북한의 민족개념: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통일

정책」, 제4권 4호 (1978).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대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 마이니치신봉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9.17).”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오스트랄리아기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답
(1974.11.4).” 「김일성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85.

———. “8·15 해방 2주년 평양시 기념대회에서 한 보고
(1947.8.14).”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79.

———.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
보고 (1961.9.11).”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81.

———. “1950년을 맞이하여 공화국 전체인민들에게 보낸 신
년사 (1950.1.1).”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80.

———. “5·1절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54.5.1).” 「김일성저
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
하기위한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

- 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
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11.20).” 「김
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
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12.16).” 「김일성저
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김구와 한 담화 (1948.5.3).” 「김일성저작집 4」.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1953.4).”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80.
- . “모든 힘을 민주기기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
하여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결론, 1948.3.29).”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40
주년 경축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회의에
참가한 우리당 및 정부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 (1957.12.5).”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8」. 평양: 조선

중앙통신사, 1958.

- .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민족운동가들과 한 담화 (1945.11.5).”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민주주의조선림시정부를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북조선 민전산하 정당, 사회단체 열성자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55. 12.28).”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10.28.
- . “사회주의혁명의 현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새 민주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업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에서 배푼 환영연에서 한 연설, 1945.10.18).”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 사, 1979.
- .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건설에 대하여 (각 도당책
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45.10.13).”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
면과업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
대회에서 한 보고, 1945.10.10).” 「김일성저작집 1」.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완전자주독립을 위
하여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
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대표 성원
들과 한 담화, 1991.8.1).” 「로동신문」, 1991.8.5.
- .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
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 이상 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3.2.8).” 「김일성
저작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조국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기 위하여 (홍남지구
인민공장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62.10.23).”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1965.4.14).”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 (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앞에서 한 강의, 1945.10.3).”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1946.3.7).”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 (952.4.25).” 「김일성저작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한 연설, 1945.8.20).”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현시기 당조직원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조직원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6.11.25).” 「김일

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10.5).”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재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우월성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정당한 로선.” 『경제연구』 (1992.3).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당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9.25).”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2.16).”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12.28).”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창운. “민족단합의 대현장 (1), 자주적인 통일국가창립은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 「로동신문」, 1993.4.24.
- . “민족단합의 대현장 (10), 전민족을 폭넓은 단합의 길로 떠미는 추동력.” 「로동신문」, 1993.5.12.
- 네언 톰. “민족주의의 양면성.”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 노태돈.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19(1992).
- 데이비스 호러스. “레닌과 마르크스주의의 민족이론의 공식.”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서울: 한겨레, 1986.
- 레닌. “레닌의 민족문제론.” Karl Marx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서울: 나라사랑, 1989.
- 로스돌스키. “노동자와 조국: 「공산당 선언」에 대한 소고.”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서울: 한겨레, 1986.
- 류 광. “민족단합의 대현장 (7),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민족단합의 기치.” 「로동신문」, 1993.5.6.
- 리규린.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10).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2).
- 리대영. “민족단합의 대현장 (2), 전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 「로동신문」, 1993.4.26.
- 리현도. “민족단합의 대현장 (4), 동족끼리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로동신문」, 1993.4.30.
- 리형진. “민족단합의 대현장 (6), 전민족을 애국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기치.” 「로동신문」, 1993.5.4.
- 마르크스·엥겔스. “공산당선언.” Karl Marx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이론: 민족해방이론의 주체적 정립을 위하여」. 서울: 나라사랑, 1989.
- . “식민지와 중주국의 관계: 아일랜드론.”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의 관계: 폴란드론.” Karl Marx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이론」.
- 마틴 닐. “마르크스주의, 민족주의, 러시아.”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 서울: 한겨레, 1986.
- 미셸 레위.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민족문제.”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서울: 한겨레 1986.
- 박봉식. “남북통일에 있어서 「민족」 「민족통일」 문제.” 「북한학보」, 17 (1993).
- 박용수.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레닌·스탈린의 시각을 중심으로.” 신용하 편. 「민족이론」. 서울: 문학과 지

성, 1985.

박진욱. “단군릉 발굴 정형에 대하여.”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북한의 ‘단군릉’ 발굴관련자료: 사회과학원 ‘보고문’
및 학술논문」. 서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徐載鎭. “북한의 민족주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을 중심으로.” 「統一研究論叢」, 제2권 1호 (1993).

송철영. “민족단합의 대현장 (8),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강령적지침.” 「로동신문」, 1993.5.8.

스즈끼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생명체론.”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동화연구소, 1991.

스탈린. “스탈린의 민족문제론.” Karl Marx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이론」.

신용하. “민족 형성의 이론.” 신용하 편. 「민족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 1985.

앤터니 스미드. “민족주의와 고전사회학 이론.”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서울: 한겨레, 1986.

양동안. “친북은 민족주의적이고 반공은 반민족주의적인가?”
「한국논단」 (1994.2).

양호민. “남북한의 민족이념.” 「통일정책」, 제4권 4호 (1978).

엄일규. “민족단합의 대현장 (5), 민족의 화합과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 「로동신문」, 1993.5.2.

오경훈. “통일운동과 ‘민족대단결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

- 대화의 「민족대단결론의 허구를 극복하자」에 대한 논평.” 「경제와 사회」, 14 (1992).
- 이종석. “단군왕릉 발굴과 북한의 민족주의.” 「통일한국」 (1994.4).
- . “조선로동당의 지도이념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 임지현. “사회주의 민족이론과 민족문제.” 「사회와 사상」, 20 (1990).
- 장석소. “조선민족제일주의형성의 중요 요인.” 「철학연구」 (1993.2).
- 전상인. “국민국가는 살아있다.” 「대화」, 2 (1994).
- . “국제정치학을 위한 역사사회학적 비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3.12.10~11).
- . “民族主義의 形成과 展開過程에 관한 一考.” 「統一研究論叢」, 제2권 1호 (1993).
- . “잃어버린 혁명, 흔들리는 이념: 한반도 사회주의 운동 백년의 회고와 평가” (한국지역연구협회의회 '93년도 통일교육연구 발표논문, 1993.4.11).
- 전영률. “김일성의 단군 및 고조선과 관련한 교시는 력사연구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은 강력한 지침.”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북한의 ‘단군릉’ 발굴관련

- 자료: 사회과학원 '보고문' 및 학술논문. 서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 정대화. "민족대단결론의 허구를 극복하자." 「사회평론」 (1992.4).
- . "통일운동론의 분화와 논쟁의 두 지점: 오경훈의 논평에 대한 답론." 「경제와 사회」, 14 (1992).
- 조해성. "민족단합의 대헌장 (3),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로동신문」, 1993.4.28.
- 지그프리드 샤이베, "기로에 선 북한경제·사회"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발표논문, 1991.6.28).
- 최길산. "우리당이 밝힌 민족문제에 관한 리론." 「남조선문제」 (1986.2).
- 최상룡. "남북한의 민족개념 비교." 「통일정책」, 제4권 4호 (1978).
- 최창빈. "고구려는 대외관계에서 시종일관 자주권을 고수한 나라." 「력사과학」 (1993.1).
- 콜라코프스키.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민족의 실체: 자연적 공동체와 보편적 형제애." 임지현 역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서울: 한겨레, 1986.
- 현명오. "첫 문명국가인 고조선의 수도 단군의 도읍지는 바로 평양이었다."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북한의 '단군릉' 발굴관련자료: 사회과학원 '보고문' 및 학술논문」.

서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호영길. “민족단합의 대헌장 (9), 민족단합을 위한 획기적인
방도.” 「로동신문」, 1993.5.10.

Bottomore, Tom. “Sociology.” in McLellan, D. ed. *Marx: The
First 100 Years*. London: Fontana, 1983.

Paik, Hak Soon.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Vol. I & II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3. 其 他

「東亞日報」.

「로동신문」.

「평양방송」.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關聯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 事例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資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北韓 民族主義 研究

研究報告書 94-08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10월 일

發行日 1994년 10월 일
